중국의 유럽 선진국 대상 경제보복 특징과 통합적 위기관리 전략

이민규

서울연구원
The Seoul Institute

중국의 유럽 선진국 대상 경제보복 특징과 통합적 위기관리 전략

연구책임

이민규 서울연구원 도시외교연구센터 부연구위원

서울연구원
The Seoul Institute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서울특별시의 정책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중국 경제보복 대비 다층 거버넌스 구축하고 당근·채찍 동시 사용하는 압박외교 구사해야

중국의 특정 정치·외교적 목적 실현 위한 경제력 도구화는 논쟁 아닌 현실

중국은 최근 10여 년 상대국 국력과 지역, 그리고 이슈 성질에 상관없이 특정 정치·외교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경제보복 조치를 취하고 있다. 몽골과 필리핀 등 개발도상국뿐 아니라 일본과 한국 등 주변 경제선진국과의 갈등에서도 경제보복이라는 압박카드를 사용한다. 심지어, 프랑스와 노르웨이 등 유럽 국가도 예외가 아니다. 또한, 역대로 첨예한 대립을 보여 왔던 영토와 인권 관련 이슈를 넘어 전염병이라는 비전통 안보 이슈에 대해서도 경제보복을 가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경제력을 도구화하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중국의 경제보복을 포함한 일련의 행위가 단기적 현상이 아닌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시진핑 집권 시기에 들어 중국은 '중국의 꿈'으로 표현되는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국가 목표의 기치로 내걸고 더욱 공세적인 강대국화를 추진 중이다. 그 과정에서 '국가핵심이익'을 더욱 공식화하고 있고, 외연확대를 통해 자국의 레드라인과 마지노선을 설정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1990년대부터 본격화된 중국 부상 논쟁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종합국력 상승에 따른 대외정책의 변화를 제대로 감지하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때문에 몇 년 전부터 중국의 경제보복이 논란이 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가가 '남의 집 불구경하듯' 하였다는 사실이다. 한국 역시 사드배치 이슈가 터진 이후에도 한중 양국 경제적 상호의존도가 주는 '착각'에 빠져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비록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지만 중국 경제보복 행위에 대한 체계적이고 다각적인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갈수록 빈번해지는 한중 사회문화 분야 갈등과 이와 관련된 경제보복 '무경험'을 고려하였을 때, 상대적으로 예측이 어려운 연성이슈에 대한 비교연구가 더욱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의 노르웨이·프랑스 경제보복, 경제 타격보다 정치적 길들이기가 목적

2008년과 2010년 인권 문제를 둘러싸고 프랑스와 중국, 노르웨이와 중국 사이에 발생한 갈등에서 드러난 중국 경제보복의 주요 목적은 경제적 타격이 아닌 정치적 압박이다. 중국은 프랑스와 노르웨이에 의해 촉발된 자국의 정치체제와 직결된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계별 위기관리 형태를 보였고, 경제보복은 그중 하나였다. 우선, 중국은 경제보복 조치를 취하기 전에, 정치·외교적 수단으로 상대를 압박한다. 중국은 프랑스와의 갈등에서 외교부 대변인 브리핑과 관영매체 논평을 통해 자국의 입장을 공표하고 프랑스를 비판한다. 8월과 12월 달라이 라마 회담을 앞두고는 주프랑스 중국대사가 직접 기자 회견을 하고, 예정되어 있던 중-EU 정상회담을 연기시킨다. 노르웨이와의 갈등에서는 수상자 발표 전에 고위급 인사를 파견하여 사적 만남의 형식을 빌려 노벨위원회 사무총장을 압박하는 모습까지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류샤오보를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지정하자 어업협상과 뮤지컬 공연 취소는 물론 '공자평화상'을 급조하여 노르웨이를 압박한다.

경제보복 역시 양국 간 경제관계를 크게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진다. 중국은 금수조치와 금융제재보다 보이콧 방식을 주로 선택한다. 이는 정치적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목적과 함께 자국 경제에 끼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의도가 반영된 결정이다. 예를 들어 중국은 노르웨이 대중국 수출 품목 중 약 30%를 차지하는 어류, 그중에서도 연어 수입을 제한한다. 그 이유는 연어가 전체 대중국 수출액 중 차지하는 비중이 약 3%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 중국은 통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불매운동을 포함한 국내 시위를 통제하는 모습을 보인다.

하지만, 한 가지 주목할 특징은 중국이 특정 정치·외교적 목적을 달성하기 전에는 경제보복을 중단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는 노르웨이 사례에서 부각되는데 중국은 2010년을 시작으로 노르웨이에 세 차례에 걸쳐 수산물 검역 강화와 연어 수입을 제한하는 조치를 내린다.

프랑스, '꽌시' 활용한 적극적 협상·'체면'외교로 중국과의 문제 신속 해결

프랑스는 2008년 4월 중국 전국적으로 '까르푸 불매운동'이 터지자 곧바로 고위급 인사를 중국에 파견한다. 눈여겨볼 부분은 외무부 등 관계 부서 담당자가 아닌 엘리제

궁 외교 고문 외에 상원의장 그리고 장 피에르 라파랭 전 총리 등을 특사로 파견하였다는 점이다. 협상력을 고려하여 협상의 담당자를 파견하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꽌시'를 중시하는 중국 문화 특성을 감안하여 중국 내에서 '중국통'으로 평가받는 전직 총리를 2008년 4월에 이어 2009년 2월에도 재차 파견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중국 문화를 고려한 정치적 결정은 '체면'외교를 실시하였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베이징 올림픽 기간 프랑스를 방문한 달라이 라마와 회담하지 않으면서 중국의 체면을 살려준다.

그렇다고 프랑스가 '당근'만 사용한 것은 아니다. 프랑스는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 보이콧 선언과 지속적인 달라이 라마 회견을 발표하면서 중국을 압박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 이슈를 EU 차원의 대응 문제로 확장시키기도 하고, 지방정부인 파리시와 의회가 나서 중국의 인권 문제를 이슈화시키기도 한다.

노르웨이, 맞대응 전략-압박외교·문화외교 병행해 중국과 관계 정상화 추진

노르웨이는 프랑스와는 달리 처음부터 노벨위원회의 결정을 비정부 행위로 규정하고 정부 차원의 문제 해결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중국의 어업협상 취소 등의 결정에 '맞대응'하는 모습을 보인다. 심지어 중국의 노르웨이산 어류 검역 강화를 WTO에 문제 제기하기까지 한다.

하지만 2013년 전후로, 특히 친중 성향의 정부가 들어선 이후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한다. 주목할 특징은 노벨평화상 문제 자체를 해결하기보다 중국과의 다른 현안에 대해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사용하는 압박외교를 보였다는 점이다. 중국의 북극평의회 정식 옵서버 지위 획득과 복수국간서비스협정 참여를 공개 지지하는 동시에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가입 신청을 하는 등 중국의 '환심'을 사기 위한 노력을 한다. 특히, 2014년에는 노르웨이를 방문하는 달라이 라마의 회담을 거부하기까지 한다.

그렇다고 '굴욕'적인 모습만 보인 것은 아니다. 노르웨이는 북극 스발바르군도 대지 구입과 제3레이더 건설 허가 취소, 그리고 중국 인권과 스파이 문제 제기 등 자국의 이익을 침해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단호한 모습을 보인다. 노중 관계 정상화 과정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반관반민' 기관이라 할 수 있는 노르웨이 박물관과 국립도서관이 중국의 문화재 반환을 통해 중국인의 감성을 자극하는 문화외교를 펼친 점이다.

다층적 소통 채널 확보하고 이슈별 사용 가능한 압박외교 카드 마련할 시점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연성 이슈 관련 중국의 경제보복에 대비하여 다층 거버넌스 구축과 압박외교 중심의 위기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위기관리 구축 방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평상시 중앙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기업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다층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다방면의 정보 수집과 공유가 되도록 하고, 각 행위체에게 역할 인식을 부여해야 한다. 더욱 중요한 것은 다층 거버넌스 틀 속에서 향후 한중간 발생할 수 있는 이슈를 선정하여 이슈별 다양한 시나리오가 마련되도록 해야 한다. 이는 사건이 양국 간 충돌 이슈로 변하기 전 중국의 조기경고를 탐지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하다.

둘째, 중국 경제보복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타깃이 된 산업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양국 간 진행 중인 산업별 경쟁 혹은 경제적 분쟁과 경제보복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른 한편, 관계 정상화 이후의 교류·협력을 위해 국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력 사태 대비와 상대국을 '악마화'하는 여론전을 자제시키는 것 역시 위기관리 방안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협상력 제고를 위해 다층 거버넌스를 위기관리 모드로 전환하고 다층적 소통 채널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한다. 구체적으로, 통합적 관리가 가능하고 역할 극대화를 위해 청와대 중심의 TF팀, 대한민국시도지자협의회 중심의 TF팀, 그리고 각 지자체 중심의 TF팀 등 상호 연결된 3단계 거버넌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다층적 소통 채널 확보와 관련해서는 ①중앙정부 차원에서 협상 당사자가 아닌 '중국통'으로 불리는 행정부, 입법부 전·현직 인사 특사 파견, ②다자 틀 속에서의 양자외교 추진, ③지자체 차원의 양자 자매·우호도시 관계와 다자 도시 네트워크 활용, ④각계의 '친중'인사 파견 등이 다각적으로 고려될 수 있다.

끝으로, 협상력 제고뿐 아니라 '정상적인' 관계 정상화를 위해 이슈별 마지노선 설정과 '채찍'으로 사용할 수 있는 협상 카드를 마련하고 활용하는 방법이 함께 강구되어야 한다.

목차

01 연구개요 — **2**
1_연구배경 및 목적 2
2_연구내용 및 방법 9

02 프중 티베트 갈등과 중국의 경제보복 — **14**
1_프중 갈등 주요 전개 과정 14
2_중국의 정치·외교적 압박 17
3_중국의 경제보복과 영향 20
4_프중 양국 분쟁 해결 과정과 특징 25

03 노중 노벨평화상 갈등과 중국의 경제보복 — **30**
1_노중 갈등 주요 전개 과정 30
2_중국의 정치·외교적 압박 32
3_중국의 경제보복과 영향 33
4_노중 양국 분쟁 해결 과정과 특징 38

04 중국 경제보복과 프·노 양국 위기관리 특징 — **46**
1_중국 경제보복 목적과 행태적 특징 46
2_프·노 양국의 대중국 위기관리 특징 52

05 대중국 통합적 위기관리 전략 — **58**
1_프중, 노중 갈등의 정책적 시사점 59
2_통합적 위기관리 전략적 방향 64

서울연구원 The Seoul Institute

참고문헌 71

Abstract 76

서울연구원
The Seoul Institute

표 목차

[표 1-1] 최근 10여 년 중국의 대표적인 경제보복 현황 3
[표 1-2] 집권시기별 중국 국가핵심이익 외연확장 현황 4
[표 1-3] 중국의 국가핵심이익 수호 방법과 주요 정책 5
[표 1-4] 후진타오 집권 시기 이후 한중 간 대표적 사회문화 갈등 7
[표 4-1] 중국 경제보복의 주요 행태적 특징 50
[표 4-2] 2013년 이후 노르웨이의 이슈별 압박외교 현황 56
[표 5-1] 프중, 노중 갈등의 정책적 시사점과 통합적 위기관리 구축 방향 62
[표 5-2] 프중, 노중 갈등의 사건 유발자와 문제 해결 주체 비교 64

서울연구원 The Seoul Institute

그림 목차

[그림 2-1] 프랑스 방문 중국거주자 현황(2005-2014년) 23
[그림 2-2] 프랑스 대중국 수출 현황(2007-2014년) 24
[그림 3-1] 노르웨이 대중국 수출 현황(2010-2016년) 35
[그림 3-2] 대중국 주요 연어수출국과 수출 현황(2010-2016년) 36

서울연구원 The Seoul Institute

01

연구개요

서울연구원
The Seoul Institute

1_연구배경 및 목적
2_연구내용 및 방법

01. 연구개요

1_연구배경 및 목적

1) 연구배경

중국의 경제력을 바탕으로 하는 공세적(assertive) 대외정책은 이미 논쟁을 넘어 현실이 되었다. [표 1-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중국은 최근 10여 년 상대국 국력과 지역, 그리고 이슈 성질에 상관없이 특정 정치·외교적 목적 달성을 위해 경제보복 조치를 취하고 있다. 몽골과 필리핀 등 개발도상국뿐만 아니라 일본과 한국 등 주변 경제선진국, 심지어 프랑스와 노르웨이 등 유럽 국가를 상대로도 경제보복이라는 외교적 압박 카드를 사용하였다. 대부분이 미국 동맹국이라는 점도 눈에 띄는 특징이다. 또한, 영토주권과 인권 이슈뿐 아니라 전염병이라는 비전통안보(non-traditional security) 이슈에 대해서도 경제보복을 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경제력을 도구화하겠다는 것이다.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래 전략적 목적 혹은 이데올로기적 필요에 의해 경제적 관계를 정치화시킨 전례가 있고,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도 유사한 형태의 경제보복을 수시로 가하게 때문에 중국의 경제보복이 전혀 새로운 것은 아니다.[1] 2010년 중국이 일본의 국내총생산(GDP)을 추월하고 세계 제2위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당연한' 측면도 있다.

문제는 1990년대부터 본격화된 중국 부상 논쟁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종합국력 상승에 따른 대외정책 변화를 제대로 감지하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여전히 중국 대외정책

---

* 본 연구는 이민규, "중국 경제보복 유럽 사례 비교연구", 「중국지식네트워크」, 제15호, 2020, pp.227-263을 수정·발전시킨 것임을 밝힘.

1) James Reilly, "China's Unilateral Sanctions", *The Washington Quarterly*, 35(4), 2012, p.121.

(혹은 외교)의 주요 사명을 개혁개방 이후 견지해온 '경제발전을 위한 평화로운 대외환경' 조성으로 인지하고 있었던 것이다.[2] 이로 인해 '화평발전론'('화평굴기론' 포함)의 수정주의적 속성, 공세적 대외정책, 무력사용 가능성 등 논쟁만 가열되었을 뿐 리스크에 대한 실질적인 위기관리(crisis management) 방안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 더 큰 문제는 중국의 경제보복이 이미 몇 년 전부터 논란이 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국가들이 '설마'하는 인식으로 '남의 집 불구경하듯' 하였다는 사실이다. 심지어 프랑스, 일본, 그리고 노르웨이 등 OECD 경제선진국들도 중국 경제보복의 대상이 되었음에도 '희망적 사고'(wishful thinking)에 빠져 있었다. 한국 역시 사드 배치 이슈가 터진 이후에도 한중 양국 경제 상호의존도가 주는 '착각'에 빠져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못 찾고 있는 실정이다.[3]

[표 1-1] 최근 10여 년 중국의 대표적인 경제보복 현황

연도	대상국	OECD 회원국	미국 동맹	핵심 이슈	이슈 성질	대응 수위
2008년	프랑스	○	○	달라이 라마 회견	연성	정치, 경제
2010년	일본	○	○	센카쿠 열도 해역 중국어선 나포	강성	무력과시
2010년	노르웨이	○	○	류샤오보 노벨평화상 수상자 선정	연성	정치, 경제
2012년	일본	○	○	일본 센카쿠 열도 국유화 선언	강성	무력과시
2016년	대만	×	×	차이잉원 총통 당선	연성	정치, 경제
2016년	몽골	×	×	달라이 라마 회견	연성	정치, 경제
2016년	필리핀	×	○	남중국해 영토분쟁	강성	무력과시
2017년	한국	○	○	사드배치	강성	정치, 경제
2020년	호주	○	○	코로나 19 책임론	연성	정치, 경제

자료: 이민규, "협력과 갈등의 기로에 선 한중관계", 이희옥, 강수정 책임편집, 『전환기 동북아 질서와 한중관계의 재구성: 한·중 학계의 시각』(서울: 도서출판 선인, 2020), p.104 참고로 수정·보완함.

시진핑(习近平) 집권 시기에 들어 중국은 '중국의 꿈'(中国梦)으로 표현되는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中华民族伟大复兴)을 국가 목표의 기치로 내걸고 있다.[4] 건국 100주

2) 이민규, 2017.06.04., "한·중 '원칙 없는 주고 받기' 안 통한다", 중앙SUNDAY.

3) 이민규, 2019.01.12., "[전문가 프리즘] 한한령 무뎌졌지만 거안사위해야", 중앙SUNDAY.

4) 학계에서는 2012년 11월 29일 시진핑 국가주석이 중국역사박물관에 전시된 '부흥의 길'을 참관하면서 언급한

년인 2049년까지 '부강하고, 민주적이고, 문명적이며, 조화롭고, 아름다운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富强民主文明和谐美丽的社会主义现代化强国)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20년과 2035년 단계별 목표까지 제시한 상태이다. 시진핑 정부의 이러한 국가대전략은 1990년대부터 본격화된 각종 '중국위협론'(China threat theory)을 불식시키기 위해 '굴기'(崛起)보다 '평화'를 강조한 화평발전(和平发展)을 제시했던 후진타오(胡锦涛) 집권 시기보다 더욱 공세적인 측면이 강하다.[5] 실제로 시진핑 국가주석을 중심으로 하는 5세대 지도부는 더욱 적극적인 강대국화를 추진하고 있다. 미국 등 선진국에 '신형대국관계'(新型大国关系)에 이어 '신형국제관계'(新型国际关系)를 요구하고 있고, 주변국에 '아시아 운명공동체'라는 화두를 던지는 등 지역대국으로서의 확실한 자리매김을 하고자 하고 있다.[6]

[표 1-2] 집권시기별 중국 국가핵심이익 외연확장 현황

국가핵심이익	집권 시기별 문제 및 빈도수(중복 포함)				합계
	후진타오 1기	후진타오 2기	시진핑 1기	시진핑 2기 (2018년)	
국가주권	2개(66.7%) 16회(94.1%)	10개(43.5%) 44회(77.2%)	18개(35.3%) 69회(52.3%)	5개(83.3%) 16회(55.2%)	35개(42.2%) 145회(61.7%)
국가안보	1개(33.3%) 1회(5.9%)	8개(34.8%) 8회(14.0%)	19개(37.3%) 43회(32.6%)	–	28개(33.7%) 52회(22.1%)
국가발전이익	–	5개(21.7%) 5회(8.8%)	14개(27.5%) 20회(15.2%)	1개(16.7%) 13회(44.8%)	20개(24.1%) 38회(16.2%)
합계	3개(17회)	23개(57회)	51개(132회)	6개(29회)	83개(235회)

자료: 이민규, 『국가핵심이익: 중국 화평발전노선의 내막을 읽는 키워드』(서울: 서울연구원, 2020), p.63.

것을 '중국몽' 담론의 본격적 등장의 출발로 보고 있음. 시진핑은 2013년 3월 12기 제1차 전국인대 폐막 연설에서 9차례 '중국몽'을 언급하였고, 2017년 10월 제19차 당 대회에서는 총20회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거론하였음. 관련 내용은 이정남, "시진핑(习近平)의 중국몽(中国梦): 팍스 시니카(Pax-Sinica)구상과 그 한계", 「아세아연구」, 제61권, 제4호, 2018, p.166; 홍건식, "시진핑의 중국몽과 정체성 정치: 일대일로, AIIB 그리고 패권정체성", 「국제정치논총」, 제58권, 제1호, 2018, p.100 참고 바람.

5) Jinghao Zhou, "China's Core Interests and Dilemma in Foreign Policy Practice", *Pacific Focus*, 34(1), 2019, pp.47-53.

6) '운명공동체'라는 개념은 2007년 중국공산당 제17차대회 보고서에서 양안관계를 대상으로 처음 거론됨. 이후 그 대상이 확대되어 현재는 '국가운명공동체', '양자운명공동체', '다자운명공동체', '지역운명공동체', 그리고 '글로벌운명공동체' 차원에서 거론되고 있음. '아시아운명공동체'는 지역운명공동체 영역으로 2015년 3월 보아오포럼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에 의해 거론됨. 우완영, 이희옥, "중국의 아시아운명공동체 담론과 외교적 투사", 「중국연구」, 제73권, 2017, pp.340-356 참고 바람.

그 과정에서 중국은 지속적인 '국가핵심이익'(国家核心利益) 개념화와 공식화, 그리고 외연확대 등을 통해 자국의 레드라인(红线)과 마지노선(底线) 설정은 물론 관련 이슈를 확장시키고 있다(집권 시기별 외연확장 현황은 [표 1-2] 참조).[7] 이는 다른 국가로 하여금 중국이 설정한 마지노선을 존중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 이에 상응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일종의 선포이다. 구체적으로 중국은 군사적 투쟁을 정치, 경제, 외교적 투쟁과 긴밀히 연계하여 '유리유거유절'(有理有据有节: 이유가 있고, 근거가 있고, 절제가 있음)하게 국가핵심이익을 수호한다는 입장이다.[8] [표 1-3]에서 알 수 있듯이 무력사용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것이다.[9]

[표 1-3] 중국의 국가핵심이익 수호 방법과 주요 정책

수호 방법	주요 정책	비중	
외교적 수단	• 국제질서 유지 및 개혁 / 공공재 제공	55.5%	–
	• 미국과 러시아의 핵심이익 존중 및 결합		15.7%
	• 외교적 타협		14.8%
	• 소프트 파워 강화		15.7%
군 현대화	• 전략적 억지 • 무력사용	13.8%	
군사 협력	• 연합훈련 • 군사 투명도 제고 • 군사안보 대화	9.2%	
경제력	• 경제 협력	–	11.1%
	• 경제적 영향력		4.6%
	• 대미 의존도 낮춤		–
국내 개혁	• 애국주의 고취	7.4%	

자료: Jinghan Zeng, "Is China Committed to Peaceful Rise? Debating How to Secure Core Interests in China", *International Politics*, 54(5), 2017, pp.618-636.

서울연구원 The Seoul Institute

7) 이민규, "중국의 국가핵심이익 시기별 외연 확대 특징과 구체적인 이슈", 「중소연구」, 제41권, 제1호, 2017, pp.49-56.

8) 이민규, "인민해방군, 중국 국가핵심이익 수호의 한 축: 역사적 사명과 강군 건설의 필요성", 「성균차이나브리프」, 제5권, 제4호, 2017, pp.111-112.

9) Jinghan Zeng, "Is China Committed to Peaceful Rise? Debating How to Secure Core Interests in China", *International Politics*, 54(5), 2017, pp.618-636.

이런 중국의 국가대전략과 수반하는 대외정책은 경제보복을 포함한 일련의 행위가 단기적 현상이 아닌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사드배치 이슈로 인해 중국의 경제보복을 당한 한국 입장에서는 비록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지만 중국 경제보복 행위에 대한 체계적이고 다각적인 연구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특히, [표 1-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강성'이슈뿐 아니라 '연성'이슈에 대해서도 경제보복을 가한다는 점을 명확히 인지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 이해와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 사드배치를 둘러싼 한중 간 갈등은 2017년 10월 한국 국가안보실 제2차장과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 간 한중 관계 개선에 관한 합의를 하면서 일단락된다.[10] 여전히 한한령(限韩令)이 해제되지 않았다는 지속적인 국내 언론 보도가 있고, 미중경쟁이 치열해 지면서 언제 다시 점화될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중단되었던 각 분야 교류·협력이 재개되고 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2016년 7월 사드배치 발표 이후 지난 4년 동안의 관련 연구와 협상을 통해 중국의 경제보복에 대한 인식도 생겼고, 경험도 어느 정도 축적이 되었다는 점이다. 실제로 2019년 8월 미국이 중거리핵전략조약(Intermediate-Range Nuclear Forces Treaty, INF)을 탈퇴한 이후, 지상 발사형 중거리 미사일을 아시아에 배치할 계획을 검토 중이라고 발표하자 중국의 경제보복을 염려하는 언론 보도와 전문가 예측이 나왔다.[11] 2017년 10월 한중 양국 합의문에서도 거론된 것처럼, MD 구축, 사드 추가 배치, 한미일 군사협력 등과 관련된 이슈는 중국 경제보복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긍정적 학습'(positive learning)이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여전히 경성이슈에 대한 중국 경제보복을 체계적으로 비교분석한 연구가 부재하지만 최소한 경험과 필요성에 대한 인지(cognition)는 형성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12]

우려스러운 점은 연성이슈 역시 중국 경제보복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제대로 형성되고 있지 않고, 관련 연구 역시 부재하다는 사실이다. 더 우려스러운 점은 [표 1-4]처럼 2004년 동북공정을 시작으로 거의 매년 역사와 문화 관련 이슈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회문화 교류·협력 강화가 경제협력과 함께 외교·안보 문

---

10) 한중 양국 간 합의된 구체적인 내용은 외교부, 2017.10.31., "한중 관계 개선 관련 양국간 협의 결과", 보도자료, http://www.mofa.go.kr/www/brd/m_4080/view.do?seq=367200 참고 바람.

11) 이와 관련된 미국과 중국 측 입장과 전문가 논평은 노컷뉴스, 2019.08.06., "美, 韓 등에 중거리 미사일 배치 추진… 제2 사드사태 되나?", https://www.nocutnews.co.kr/news/5193581 참고 바람.

12) 사드배치로 인한 중국의 경제보복을 연구한 관련 연구는 유현정, 주재우, "한국의 사드배치 결정에 대한 중국의 대한(對韓) 경제보복과 한국의 대응방안", 「세계지역연구논총」, 제35권, 제2호, 2017, pp.167-186; 김진용, "사드 배치와 중국의 대한국 강압외교 동인", 「동아연구」, 제37권, 제2호, 2018, pp.221-249 참고 바람.

제 해결 방안으로 제시가 된다는 현실이다. 한중 양국 국민들의 강한 민족주의 정서로 인해 역사와 문화적 동질성이 협력의 촉매제가 아닌 '다름을 추구하는' 갈등의 요소로 등장하고 있음에도 한중 관계 28년을 관통하고 있는 '구동존이'(求同存异)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역사 문제 포함 사회문화 분야 이슈는 그 자체가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지만 다른 전략적·이념적·감정적 문제를 촉발시키거나 역으로 영향을 받아 갈등을 증폭시킬 수도 있다.[13]

[표 1-4] 후진타오 집권 시기 이후 한중 간 대표적 사회문화 갈등

일시	주요 갈등 사례
2004년	• 동북공정
2005년	• 강릉 단오제 유네스코 등재
2006년	• 동북공정
2007년	• (창춘 동계아시안게임 시상식) 한국 여자 쇼트트랙 선수들의 '백두산은 우리땅' 퍼포먼스
2008년	• 공자 한국인 설 설전 • 베이징 올림픽 성화 봉송 폭력 사태 • SBS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 리허설 사전 보도
2010년	• 첨단 정보기기 한글 자판 국제표준화 논란
2011년	• 아리랑 중국 국가무형문화 유산 등재
2016년	• 대만출신 아이돌 가수의 '청천일백기' 사건 • KBS 드라마 '무림학교' 인민폐 소각 장면
2020년	• KBS '놀면 뭐하니', '마오 어때요' 발언

주: 2017년 이후 발생한 사회문화 분야 갈등은 중국 경제보복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불포함.

자료: 임대근, "대중문화", 성균중국연구소 엮음, 『한중수교 25년사』(서울: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17), pp.131-133 참고로 저자 작성.

다른 한편, 미중경쟁이 본격화되면서 신장과 티베트 등 인권 문제와 홍콩, 대만 등 독립 이슈가 다시금 불거지고 있다. 이 문제들은 그동안 한국이 전략적으로 회피해온 이슈들이다. 하지만, G20국가로 성장한 한국이 주권과 함께 전 세계적 가치인 인권 이슈를 언제까지 '회피'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홍콩 우산혁명과 국가보안법 문제가 불거졌을 때 홍콩 내 민주인사들이 한국 측에 공개적으로 지지를 요청했던 것처럼 앞으로 중국 인권과 관련된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된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13) 이민규, "협력과 갈등의 기로에 선 한중관계", 이희옥, 강수정 책임편집, 『전환기 동북아 질서와 한중관계의 재구성: 한·중 학계의 시각』(서울: 도서출판 선인, 2020), pp.100-108.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이상의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중국의 연성이슈 관련 경제보복 사례 비교분석을 통해 정책적 시사점과 함께 통합적 위기관리 구축 방향을 모색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특히, 국가 간 갈등 과정에서 어떤 행위체들이 어떠한 역할을 구체적으로 하는지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한국의 수도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시는 물론 각 지자체들이 다층 거버넌스에 대한 개념을 인식케 하고, 국가 간 갈등 상황에서 어떠한 위기관리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남·북한 분단으로 인해 미중 간 군사 분쟁 발생 가능성이 제일 높은 지역 중 하나로 꼽히는 한반도의 '도시'로서 유럽 등 선진 국가 도시들은 '평화구축'을 도시외교의 핵심 어젠다로 선정하고 전 세계 분쟁 지역에 활발히 관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14] 북핵 이슈와 미중경쟁으로 인해 '불확실성'이 더욱 높아진 상황에서 분쟁 이슈에 대한 인식과 이에 대한 위기관리 방안 구축 노력은 당연하다. 사드배치라는 미중 간 '전통안보'(traditional security) 이슈의 당사자는 중앙정부였지만, 그 피해는 막상 서울을 포함한 특정 지역, 산업, 그리고 일반 시민이었다는 경험을 정책화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중국 경제보복의 전반적 특징은 물론 과거 사례에서 중국과 상대국이 보인 위기관리 특징을 단계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위기관리를 경제보복 전과 후로 구분하여 중국과 상대국이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살펴보고, 이에 따른 경제보복의 영향과 기간 등을 비교분석한다. 이와 함께, 문제 해결 과정에서 보인 전략과 수단을 시간 순서대로 분석하여 위기관리 패턴을 규정한다. 끝으로, 중국 경제보복과 상대국 위기관리 특징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중국의 연성이슈 관련 경제보복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응하는 통합적 위기관리 정책방향을 제시한다.

---

14) 2015년 기준, 전 세계적으로 약 170여 개 도시 네트워크(city network)가 구축되어 환경, 빈곤과 불평등, 에너지, 그리고 평화구축 문제를 해결하고자 활발한 활동을 진행 중에 있음. 그중 평화구축을 어젠다로 다루는 도시 네트워크는 약 11%로 네 번째로 주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음. Michele Acuto and Steve Rayner, "City Networks: Breaking Gridlocks or Forging (new) Lock-ins?", *International Affairs*, 92(5), 2016, pp.1153-1154.

2_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내용

제1장은 연구개요로서 연구배경과 목적, 그리고 연구방법과 각 장별 주요 내용을 간략히 소개한다. 연구배경에서 최근 10여 년 중국의 대표적인 경제보복 사례와 전반적인 특징을 알아보고, 향후에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한다. 특히, 사드배치로 중국의 경제보복을 당한 경험이 있는 한국은 강성이슈뿐 아니라 연성이슈에 대한 이해와 대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연구방법에서는 2008년 프랑스와 중국 간의 갈등과 2010년 노르웨이와 중국 간의 갈등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한 주요 이유를 자세히 설명한다.

제2장에서는 2008년 티베트 사태가 발단이 된 프랑스와 중국 사이의 갈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한다. 프중 갈등의 발단에서 종결까지 주요 전개 과정을 서술한 후에, 양국의 단계별 위기관리 특징, 그리고 중국 경제보복 행태와 영향을 살펴본다. 단계별 위기관리 특징은 경제보복 전과 후, 그리고 분쟁 해결 과정을 구분해서 분석한다.

제3장에서는 2010년 노벨평화상 문제를 둘러싸고 발생한 노르웨이와 중국 사이의 갈등을 사건 전개과정과 분쟁해결 과정 두 가지 측면에서 중점 분석한다. 노중 갈등의 주요 전개 과정을 우선적으로 살펴본 후에 경제보복 전 중국의 정치·외교적 압박이 있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그리고 중국 경제보복과 영향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노중 양국 특히 노르웨이의 중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위한 압박외교(coercive diplomacy)를 다층적으로 검토한다.

제4장에서는 제3장까지의 사례 분석 결과를 비교하여 중국 경제보복의 목적과 행태적 특징, 그리고 프랑스와 노르웨이 양국의 대중국 위기관리 특징을 규정한다.

제5장은 결론으로 사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중국 통합적 위기관리 구축 정책방향을 제시한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중국 경제보복과 상대국의 대중국 위기관리 과정에서 나타나는 패턴적인 특징을 분석해 내기 위해 유사 사례에 대한 비교연구를 실시하였다. 구체적인 분석방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표 1-1] 사례들 중 프랑스와 중국, 노르웨이와 중

국 사이에 발생한 연성이슈를 분석 대상으로 선택하였다. 우선, 프랑스와 노르웨이는 모두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으로 다원적 민주주의 체제를 갖춘 경제선진국들이다. 몽골과 같은 개발도상국과 달리 민주-자본주의 선진국에 대한 경제보복은 경제적으로 '굴복'시키기 어려울 뿐 아니라 유럽 국가 특성상 인권 이슈가 부각되어 유럽연합(EU) 심지어 세계 여론의 역풍을 받을 수 있다. 중국의 경제보복에 의해 중국이 역으로 경제적 타격을 받는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프랑스와 노르웨이 모두 물리적 거리로 인해 중국의 무력사용(use of force)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로 인해 국가핵심이익 수호를 위한 중국의 정치, 경제, 외교, 그리고 군사적 투쟁의 유기적 연계 특징을 파악할 수는 없지만, 역으로 경제적 투쟁 즉 경제보복의 특징을 더욱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다른 한편, 달라이 라마(Dalai Lama) 회견과 류샤오보(刘晓波) 노벨평화상 수상자 선정 이슈는 모두 중국 정치체제와 밀접히 연관된 인권 문제로 미중 경쟁의 주요 충돌 이슈이다. 향후 언제든지 불거질 수 있는 이슈라는 것이다. 이와 동시에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래 지속적으로 제기된 이슈이기 때문에 중국의 경제보복 가능성을 예측하기 힘들기도 하다. 즉, 위기 촉발 시점과 경제보복 전 단계를 예상하기 어렵다. 이런 특징은 사회문화 분야 갈등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그러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문제는 다르지만 유사한 특징을 가진 두 이슈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고, 그 연구 결과는 다른 조건의 연성이슈 혹은 강성이슈 사례와의 비교연구 기준이 될 수 있다.

끝으로, 2016년 중국과 대만 간의 갈등은 국가 간 국제분쟁이자 내정이라는 두 가지 특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외되었다. 더욱 중요한 이유는 1949년 이후 중국이 국제정세와 무관하게 세 번이나 대만에 무력을 사용한 적이 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대만 관련 충돌 이슈는 경제보복보다는 무력사용 가능성이 더욱 중요하다. 다른 한편, 2020년 중국의 호주에 대한 경제보복 사례는 아직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둘째, 위기관리 단계와 행태 특징을 동일한 기준에서 분석하기 위해 '국제위기행위'(international crisis behavior) 프로젝트팀에서 제시한 분류법과 구체적 내용을 참고하였다. 국제위기 촉발(break) 행위, 위협의 심각 정도(gravity of value threat), 그리고 위기관리 기술(crisis management technique) 등을 경제보복 조치를 취한 시점을 기준으로 전후 외교적 수사와 행위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15]

셋째, 통시적으로 경제보복 방법과 위기관리 수단을 파악하기 위해 관련 연구에 대한 문헌회고를 기본으로 언론 보도 검색을 다각적으로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이 기존의 대부분 연구처럼 중국의 경제보복 의도 파악이 아닌 만큼 양국 갈등 과정의 '숲'과 함께 '나무'를 보기 위해 일 단위로 연대표를 작성하여 사건을 재구성하였다. 중국 경제보복의 대상 산업(혹은 분야)과 영향 역시 기존 연구 결과를 참고로 갈등 발생 전후의 구체적인 통계 수치를 조사·분석하였다.

서울연구원
The Seoul Institute

15) 국제위기행위 프로젝트와 달리 본 연구는 질적 연구이기 때문에 프로젝트팀에서 제시한 기준과 분류법, 그리고 구체적인 수단 및 고려 변수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았음을 밝힘. 국제위기행위 프로젝트 역사와 구체적인 내용은 https://sites.duke.edu/icbdata/(ICB Project 홈페이지) 참고 바람.

02

프중 티베트 갈등과 중국의 경제보복

서울연구원
The Seoul Institute

1_프중 갈등 주요 전개 과정
2_중국의 정치·외교적 압박
3_중국의 경제보복과 영향
4_프중 양국 분쟁 해결 과정과 특징

02. 프중 티베트 갈등과 중국의 경제보복

1_프중 갈등 주요 전개 과정

2008년 중국의 프랑스에 대한 경제보복은 니콜라 사르코지(Nicolas Sarkozy) 프랑스 대통령의 그해 3월 발생한 티베트 사태에 대한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 보이콧(boycotts)과 8월과 12월 달라이 라마 회견 추진으로 인해 발생한 사건이다.

프중 양국은 2007년 11월 25일 사르코지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할 때만 해도 160대의 에어버스 항공기 구입과 2기의 원자력 발전소 공사를 포함한 약 296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는 등 밀월관계를 연출하였다.[16] 당시 중국 외교부는 사르코지의 방중을 프중 양국 관계의 '일대 사건'(一件大事)으로 평가하며, '전면적 전략동반자 관계'(全面战略伙伴关系)를 더욱 발전시킬 것이라는 기대감을 내비친다.[17]

하지만, 2008년 3월 14일 티베트 사태가 발생하면서 양국 관계는 급속히 냉각된다. 베르나르 쿠슈네르(Bernard Kouchner) 프랑스 외무장관이 3월 28일 열리는 EU 회원국 외무장관회의에서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 보이콧 검토를 제안할 것이라고 밝힌데 이어, 3월 25일에는 사르코지 대통령이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 불참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말로 중국을 자극한 것이다.[18] 4월 4일에는 프랑스 외교 및 인권사무 국무비서 라마 야드(Rama Yade)가 르 몽드(Le Monde) 기자와의 담화에서 사르코지 대통령의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 참가를 위한 세 가지 조건까지 제시한다. 당일 오

16) 구체적인 체결 현황은 The Washington Post, 2007.11.26., "France Gets $29.62B in Chinese Contracts", https://www.washingtonpost.com/wp-dyn/content/article/2006/10/26/AR2006102601202.html 참고 바람.

17) 중국 언론의 관련 보도와 구체적인 발언은 新华社(中央政府门户网站), 2007.11.25., "法国总统萨科齐抵达西安 开始对中国进行国事访问", http://www.gov.cn/jrzg/2007-11/25/content_814870.htm 참고 바람.

18) '국경 없는 기자회'가 여론조사기관 CSA에 의뢰한 조사에 의하면, 53%의 프랑스인들이 사르코지 대통령의 올림픽 개막식 보이콧을 지지한 것으로 나타남. 중앙일보, 2008.03.26., "사르코지 '올림픽 개막식 보이콧할 수도'", https://news.joins.com/article/3087307 참고 바람.

후 라마 야드가 대화 사실을 부인했지만 기자가 녹음본이 있다고 밝히면서 프랑스 정부와 언론 간의 충돌이 발생하기도 한다.[19] 설상가상으로 2008년 4월 7일 파리에서 열린 베이징 올림픽 성화 봉송 과정에서 티베트 독립 옹호세력의 방해로 세 번이나 성화가 꺼지는 사태까지 일어난다. 이런 상황에서 프랑스 최대 통신사인 AFP는 현지 시간 4월 8일 중국이 달라이 라마와 대화를 재개하지 않으면 프랑스는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을 보이콧하겠다는 보도를 하게 되고, 양국의 대립은 본격화된다.[20]

이때까지 직접적 행동을 자제하던 중국인들은 4월 9일을 기점으로 중국 국내·외 인터넷 포럼을 통해 '까르푸 불매운동'을 전개한다. 4월 19일에는 베이징을 비롯한 중국 전역 주요 도시의 까르푸 매장 앞에서 대규모 시위를 벌인다. 하지만, 이러한 중국 내 반(反)프랑스 정서가 고조되는 상황에도 프랑스 정부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다. 4월 10일 유럽의회는 티베트 사태를 주요 이유로 유럽연합 27개 회원국 지도자들에게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 보이콧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한다. 이런 와중에 4월 21일 프랑스 사회당 소속 파리 시장 베르트랑 델라노(Bertrand Delanoe)가 파리 시의회에 달라이 라마에게 파리 명예시민 호칭을 부여하는 결의안을 제출하기까지 한다. 같은 날, 국가모독죄로 수감 중인 중국인 인권운동가 후지아(胡佳)에게 '명예시민' 호칭을 수여하는 안건까지 통과시키는 등 중국을 자극한다.[21]

베이징 올림픽을 한 달여 앞둔 6월 30일에도 사르코지 대통령은 국영방송국 연설을 통해 중국 정부와 달라이 라마 간의 회담에 진전이 없을 경우 개막식에 불참하겠다는 의사를 다시 한 번 공개적으로 밝힌다.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 보이콧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던 프중 양국은 8월로 예정되어 있던 달라이 라마 프랑스 방문 일정으로 더 큰 위기를 맞게 된다. 다행히 프랑스가 강경한 입장을 철회하면서 양국 관계가 파국으로 치닫는 상황은 피하게 된다. 7월 9일 일본에서 개최된 G8 정상회담에서 사르코지 대통령은 후진타오 국가주석에게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한다. 8월 6일에는 달라이 라마 프랑스 방문 기간 동안 사르코지 대통령과는 만나지 않을 것임을 밝힌다. 이로 인해 실제

---

19) 프랑스가 제시한 세 가지 조건은 ①중국정부의 진압 중지, ②정치범 석방, 그리고 ③달라이 라마와 대화임. 당시 프중 양국 간 발생한 주요 사건과 관련 발언은 人民网(搜狐网), 2009.11.26., "李其庆: 中法外交风波与中国新时期外交", http://news.sohu.com/20091126/n268484680.shtml 참고 바람.

20) 사르코지 대통령의 구체적인 발언은 아시아경제, 2008.04.09., "사르코지 '올림픽개막식에 프랑스 참가 안할 수도'", http://m.asiae.co.kr/view.htm?no=2008040900281781085#ba 참고 바람.

21) RFI, 2008.04.21., "达赖胡佳获巴黎市荣誉市民称号, 很多议员未参加投票", http://www1.rfi.fr/actucn/articles/100/article_7047.asp 참고 바람.

로 2008년 8월 중순 12일 일정으로 프랑스를 방문한 달라이 라마는 프랑스 영부인 카를라 부르니(Carla Bruni)와 사회당 지도자 세골렌 루아얄(Ségolène Royal) 등과만 회담하게 된다.[22]

프랑스의 태도 변화로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던 양국 관계는 12월로 예정된 노벨평화상 수상자 모임에서 달라이 라마를 회견하겠다는 사르코지 대통령의 입장 표명으로 다시 한 번 급속히 악화된다. 중국 측의 강력한 반대와 경제보복이라는 경제적 압박에도 불구하고 사르코지 대통령과 달라이 라마 간의 회담이 이루어지자 양국 관계는 결국 파국으로 치닫게 된다.

서울연구원 The Seoul Institute

22) 달라이 라마 프랑스 방문 전후의 주요 사건과 관련자의 발언은 人民网(搜狐网), 2009.11.26., "李其庆: 中法外交风波与中国新时期外交", http://news.sohu.com/20091126/n268484680.shtml 참고 바람.

2_중국의 정치·외교적 압박

중국은 프랑스와의 갈등 과정에서 압박 수준을 단계적으로 높인다. 경제보복을 가하기 전에 구두 경고를 포함한 정치적 압박을 가한다. 중국 나름대로 단계별 위기관리를 시행한 것이다. 또한, 정치·외교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의 '도발'이 지속되자 위협 수준을 점차적으로 높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1) 올림픽 개막식 보이콧과 중국의 신중한 조기 경고

2008년 3월 14일 티베트 사태가 발생하자 중국은 '내정 불간섭' 원칙을 내세워 프랑스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비난에 대응한다. 중국은 외교부 대변인의 발언 등을 통해 자국의 입장 표명은 물론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 참석 보이콧을 선언한 국가들을 직접적으로 비판한다. 4월 1일 중국은 장위(姜瑜) 외교부 대변인의 발언을 통해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에 '불참하면 중국을 고립시킬 수 있다고 여기지 말 것이며, …… , (결국에는) 자신의 이미지(形象)와 이익을 훼손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23] 4월 10일에는 올림픽 헌장의 원칙과 정신까지 거론하며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인 자크 로게(Jacques Rogge)를 포함한 IOC 관계자들의 정치 편향적인 태도를 비난한다. 이와 함께, 티베트 관련 일은 중국 내정으로 지금까지 약 130개 국가가 중국 정부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지지 혹은 이해 표명하였음을 강조한다. 이런 차원에서 중국은 달라이 라마 문제를 인권과 종교문제가 아닌 분열과 반분열 투쟁이자 폭력과 반폭력 투쟁의 문제(达赖问题的实质不是人权或宗教问题，而是分裂与反分裂的斗争，是暴力与反暴力的斗争)로 규정한다. 특히 눈여겨 볼 표현은 중국 정부가 티베트 이슈를 주권과 영토완정의 중대한 원칙적 문제(主权和领土完整的重大原则问题)로 규정한 부분이다.[24]

중국의 국제사회에 대한 비판은 이에 그치지 않고, 까르푸 불매운동이 한창이던 4월 15일에는 중국 국민의 불매운동은 자신의 의견과 정서를 표현한 것으로 합법적일 뿐

---

23) 中华人民共和国外交部(中华人民共和国外交部驻澳门特别行政区特派员公署), 2008.04.01., "2008年4月1日外交部发言人姜瑜举行例行记者会", http://www.fmcoprc.gov.mo/chn/gsxwfb/lxjzzdh/t420120.htm.

24) 중국 정부는 달라이 라마를 지지하는 것은 중국의 국가이익을 훼손시키는 것으로 우호적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들이 이런 우를 범하지 않기를 희망한다는 의견을 피력함. 당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구체적인 발언은 中华人民共和国外交部(中华人民共和国驻日本国大使馆), 2008.04.10., "2008年4月10日外交部发言人姜瑜举行例行记者会", http://www.china-embassy.or.jp/chn/fyrth/t423638.htm 참고 바람.

만 아니라 합리적이며, 프랑스 정부는 심사숙고하고 반성해야 한다는 논평까지 내놓는다.[25] 하지만, 전국적으로 불매운동이 일어나자 중국 정부는 사태가 악화되어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지는 것을 매우 경계한다. 베이징 올림픽을 3개월 남짓 남긴 상황에서 전국적인 불매운동이 자칫 올림픽 개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반(反)서방 시위가 반정부 시위로 바뀔 가능성에 대한 염려가 반영된 태도 변화라고 할 수 있다. 2008년 4월 19일 전국적으로 시위가 발생하자 중국 정부는 관영 매체를 통해 자제를 촉구하는 등 신중한 모습을 보인다. 중국의 관영 통신사인 신화통신은 대외경제무역대학의 장쥔(张军) 교수 등의 말을 빌려 세계화 시대에 특정 기업 혹은 상품에 대한 보이콧은 자칫 자국의 이익을 훼손시킬 수 있음을 강조한다.[26] 4월 24일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는 이성적 애국심 발휘를 촉구하기도 한다.[27]

2) 달라이 라마 회담과 중국의 강력한 정치적 압박

다른 한편 중국은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 보이콧 이슈와는 달리 달라이 라마와의 회담 문제에 있어서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한다. 중국은 달라이 라마의 12일 일정의 프랑스 방문 기간 동안 사르코지 대통령과의 만남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한다. 2008년 7월 8일 쿵취안(孔泉) 프랑스 주재 중국 대사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프랑스에 공개적으로 정치적 압력을 가한다. 만약에 사르코지 대통령이 달라이 라마를 만난다면 양국 관계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것이다. 이 발언이 공교롭게도 일본에서 개최된 G8 정상회의에서 사르코지 대통령이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에게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직후에 나왔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28]

중국의 경고는 12월로 예정된 사르코지 대통령과 달라이 라마와의 회담을 앞두고 더욱 강력해진다. 중국은 11월 2일 중국 외교부 대변인 류지엔차오(刘建超)의 발언을 통해 반대 입장을 밝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월 13일 월간 '국제정치'가 수여하는

---

25) 외교부 대변인 장위의 구체적인 발언은 中华人民共和国外交部(搜狐网), 2008.04.15., "2008年4月15日外交部发言人姜瑜举行例行记者会", http://news.sohu.com/20080415/n256317064.shtml 참고 바람.

26) 구체적인 발언은 新华社(中央政府门户网站), 2008.04.19., "专家: 经济全球化时代 理性对待'抵制家乐福'事件", http://www.gov.cn/jrzg/2008-04/19/content_949293.htm 참고 바람.

27) 人民日报, 2008.04.24., "爱国, 在道义与法治的轨道上".

28) 중국이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 참석 이슈와 달라이 라마 회담 문제를 분리해서 접근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당시 중국과 프랑스의 티베트 문제에 대한 입장은 유로포커스, 2008.07.10., "사르코지의 대 중국 외교 갈팡질팡", http://euro-focus.kr/news/viewbody.php?board=alaune&page=13&number=3058&search=section&genre 참고 바람.

'용감한 정치상' 수여식에서 사르코지 대통령이 달라이 라마를 깊이 존경하는 고귀한 인물이라 칭하며 2008년 12월 6일 폴란드에서 만날 것이라고 밝히자, 11월 14일 다시 한 번 외교부 대변인 친강(秦刚)의 발언을 통해 경고한다. 다른 한편, 중국은 항의 겸 경고 차원에서 12월 초로 예정되어 있던 제11차 중-EU 정상회담을 연기한다. 11월 26일 중국 외교부 대변인 친강은 "티베트 문제는 중국의 주권, 영토완정, 그리고 '핵심이익' 관련 이슈"로 이번 연기 조치가 불가피했음을 강조함과 동시에 프랑스의 관련 정책과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29] 회담을 이틀 앞둔 12월 4일에는 양국의 경제무역 협력을 해칠 수밖에 없으며, '(프랑스가 피해의)몇 백억 달러의 무역 협의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경제보복 가능성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기까지 한다. 한 가지 주목할 부분은 이와 관련해서 환구왕(环球网)에서 여론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인 97.4%가 프중 무역관계를 훼손시킬 것이라고 대답한 자료를 근거 중 하나로 제시한 점이다. 즉, 중국의 경제보복 결정 여부는 민의가 반영된 결과라는 것이다.[30]

서울연구원 The Seoul Institute

29) 중-EU 정상회담 연기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东方卫视(搜狐网), 2008.11.27., "视频: 萨科齐将见达赖, 中方推迟中欧领导人会晤", http://tv.sohu.com/20081127/n260886548.shtml 참고 바람.

30) 이와 관련한 외교부 대변인의 구체적인 발언과 여론조사 결과는 环球时报(CCTV.com), 2008.12.06., "中国民意警告法国将为见达赖付出代价", http://news.cctv.com/world/20081206/101415.shtml 참고 바람.

3_중국의 경제보복과 영향

2008년 프중 갈등 과정에서 중국은 정치적 압박과 함께 단계적으로 경제보복 수위를 높인다. 중국이 취한 구체적인 경제보복 조치를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 보이콧, 달라이 라마 회담 전과 후 등 세 시기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까르푸 불매운동과 프랑스 관광 '금지령'

첫 번째 시기는 2008년 4월로 전국적으로 까르푸 불매운동이 일어난다. 이 불매운동은 전형적인 소비자 주도 보이콧으로 집단적 행동에 인터넷이 결정적 역할을 한다. 4월 9일을 시점으로 중국 국내·외 수십 개의 인터넷 포럼에서 불매운동이 일어난다. 4월 14일에는 중국 최대 메신저인 QQ와 휴대폰 메시지, 그리고 MSN 등을 통해 급속히 확산된다. 중국의 대표적인 검색엔진인 바이두(百度)에 '까르푸 보이콧'(抵制家乐福) 관련 문서가 약 35만 건이나 검색될 정도로 빠른 속도로 전파가 되었다. 또한 중국의 대표적 포털 사이트인 시나닷컴(新浪)이 '까르푸 불매운동' 인터넷 투표를 실시할 정도로 불매운동의 열기는 대단하였다. 당시 중국인들의 인터넷 불매운동은 '사이버 민족주의' 현상이 대두될 정도로 수위가 급속히 높아진다. 처음에는 까르푸 최대 주주인 프랑스 루이비통 모에 헤네시(LVMH: Louis Vuitton Moët Hennessy) 그룹의 모든 제품 구매 반대를 주장하다가 점차 '프랑스 제품 불매운동', 그리고 '까르푸 불매운동'으로 구체화된다. 심지어 '올림픽을 지지하지 않는 모든 국가의 제품'을 불매하자는 주장까지 나온다. 까르푸 불매운동 기간과 관련해서도 처음에는 5월 1일 하루만 구매하지 말자는 주장이 주를 이루다가, 여론이 악화되자 올림픽 개최 3개월 전인 5월 8일에서 24일까지 총 17일간 이용하지 말자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한다.

까르푸 불매운동 여론이 급속도로 악화되자, 4월 16일 까르푸 중국 본부는 공식성명 발표를 통해 티베트 독립을 지원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해명을 한다. 그리고 까르푸 회장의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 참가 결정을 밝힌다. 4월 17일에는 LVMH 그룹 차원에서 다시 한 번 공식성명을 발표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월 18일과 20일 사이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칭다오 등 중국 전역 주요도시의 까르푸 매장 앞에서 대규모 시위가 발생하는 등 여론은 악화된다.[31]

---

31) 구체적인 까르푸 불매운동에 대해서는 이원봉, 2018, "中, 불타는 애국심…속 타는 까르푸", Kotra 해외시장뉴스,

다른 한편, 중국 정부는 단체관광을 포함한 프랑스 관광을 제한한다. AFP 통신에 의하면, 2008년 5월 베이징시는 베이징에 있는 여행사에 프랑스 관광 상품 판매 금지 명령을 구두로 내린다. 중국 정부는 이를 부인하며 티베트 사태 발생 이후, 특히 4월 파리에서 발생한 올림픽 성화 봉송 사건으로 인한 민간의 자발적인 프랑스 여행 취소라고 주장하지만, 프랑스 정부와 언론은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32] 6월초 프랑스 외교부 대변인은 베이징시의 '금지령'을 인지하고 있으며, 베이징시뿐만 아니라 중국 정부와도 교섭 중에 있음을 밝히며 강력한 항의 메시지를 던진다.[33]

2) 항공기 판매 최종 협상 연기와 외교적 '고립'을 통한 정치·경제적 타격

(1) 달라이 라마 회담 전, 에어버스 항공기 판매 최종 협상 연기

2008년 12월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의 달라이 라마 회담을 앞두고 중국은 다시 한 번 경제보복을 가한다. 11월 28일 중국은 12월초로 예정된 프랑스 에어버스와의 항공기 판매 최종 협상을 연기시켜 버린다. 이는 2007년 11월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의 첫 방중 때 성사된 계약으로 단순한 경제적 타격 이상의 정치적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결정이다.

(2) 달라이 라마 회담 후, 외교적 '고립'과 우회적 경제보복

중국의 경제보복 조치에도 불구하고 12월 6일 사르코지 대통령이 달라이 라마를 회담하자, 중국은 프랑스에 대해 사이버 공격은 물론 외교적으로도 고립시키고자 한다. 중국은 우선 2009년 1월 27일로 예정된 프랑스 대통령궁 주최의 프중 수교 45주년 기념식 행사를 취소시킨다. 참석자 명단에 있던 중국 요인들 모두 프랑스 측의 초청에 응하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AFP 통신에 의하면, 주베이징 프랑스 대사관 웹사이트가 며칠 동안 접속이 되지 않는 등 중국의 보복성 사이버 공격이 가해진다.[34]
이에 그치지 않고, 중국은 원자바오(温家宝) 중국 총리의 유럽순방에 프랑스를 의도

---

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3/globalBbsDataView.do?setIdx=242&dataIdx=42052 참고 바람.

32) 프랑스 여행 업계의 반응과 현황에 대해서는 环球时报, 2008.05.30., "中国抵制是法国旅游业的'灾难'", https://world.huanqiu.com/article/9CaKrnJkxm2?w=280 참고 바람.

33) 프랑스 외교부 대변인의 구체적인 발언과 AFP 통신의 관련 보도는 环球时报, 2008.06.10., "法国呼吁中国停止'旅游抵制'", https://world.huanqiu.com/article/9CaKrnJkzbg?w=280 참고 바람.

34) 관련 보도는 France 24, 2008.12.13., "France claims a cyber attack on its Beijing embassy website", https://www.france24.com/en/20081211-france-claims-cyber-attack-its-beijing-embassy-website- 참고 바람.

적으로 제외시키고, 이 순방을 '믿음의 여행'(信任之旅)으로 명명한다.[35] 원자바오 중국 총리는 1월 27일에서 2월 2일까지의 유럽순방 기간 동안 스위스(27~28일), 독일(28~29일), 스페인(30~31일), 그리고 영국(31일~2월 2일) 등 유럽 주요 국가와 EU 본부(29~30일) 방문을 통해 유럽과의 협력 관계를 강화한다. 중국은 유럽 국가들과 금융위기 등 글로벌 이슈에 대한 논의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큰 경제적 선물도 안긴다. 중국은 이 국가들과 총 150억 위안 규모의 38개 협정을 맺는다.[36] 이는 중국이 의도적으로 2008년 하반기 EU 의장국인 프랑스를 방문하지 않고, 유럽 다른 강국들과의 경제협정을 통해 우회적으로 프랑스에 경제보복을 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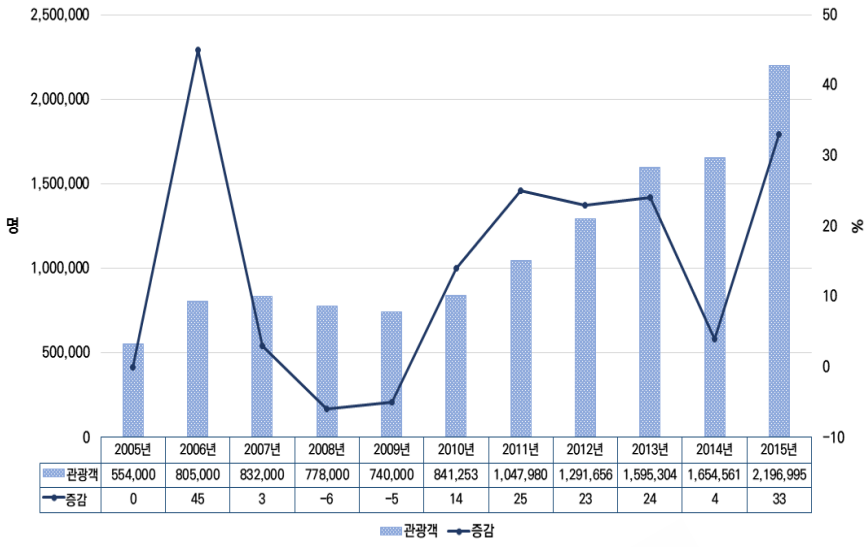
3) 중국 경제보복의 영향

중국 정부의 일련의 정치·외교적 압박과 경제보복 조치로 프랑스의 관광업과 대중국 수출은 일정부분 타격을 받게 된다. 우선, [그림 2-1]에서 알 수 있듯이, 프랑스 방문 중국 거주자(by country of residence)는 2008년과 2009년 모두 전년 대비 약 6%p와 5%p 감소한다. 2007년 약 83.2만 명이던 프랑스 방문 중국 거주자는 2008년 약 77.8만 명으로 약 5.4만 명 감소한다. 2009년에는 3.8만 명이 더 감소하여 74만 명 규모로 줄어든다. 2007년 대비 약 9.2만 명이 감소한 수치이다. 2010년 프중 양국 관계가 개선되면서 곧바로 2007년 수준으로 회복하게 되고, 2010년 100만 명을 돌파한 후에 2015년 200만 명까지 증가한 것을 고려하였을 때, 2008년과 2009년 프랑스 관광업계의 직·간접 손실은 예상보다 더 컸다고 추정할 수 있다.
한 가지 눈여겨 볼 점은 이 기간 중국 방문 프랑스인(by nationality) 역시 감소하였다는 사실이다. 2007년 약 46.3만 명의 프랑스인이 중국을 방문했던 것에 비해, 2009년 약 42.4만 명으로 약 3.8만 명이 감소한다. 양국 관계 악화로 프중 모두 상호 방문이 줄어든 것이다.

---

35) James Reilly, "China's Unilateral Sanctions", *The Washington Quarterly*, 35(4), 2012, p.126.

36) 유럽순방 목적, 일정, 그리고 성과에 대해서는 新华社(中央政府门户网站), 2009.01.27., "温家宝总理27日下午抵达瑞士苏黎世开始欧洲之行", http://www.gov.cn/ldhd/2009-01/27/content_1216324.htm 참고 바람.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관광객	554,000	805,000	832,000	778,000	740,000	841,253	1,047,980	1,291,656	1,595,304	1,654,561	2,196,995
증감	0	45	3	-6	-5	14	25	23	24	4	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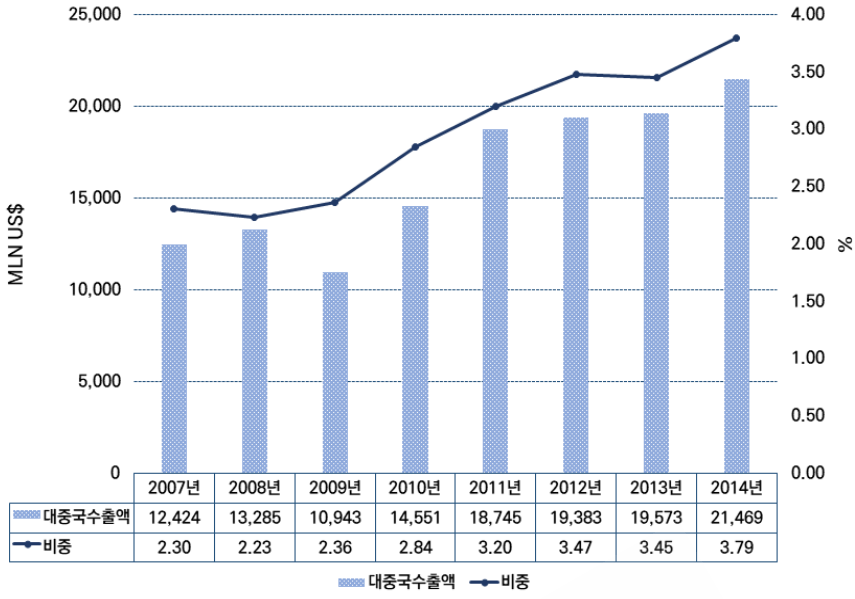
[그림 2-1] 프랑스 방문 중국거주자 현황(2005-2014년)

주: 중국 거주자 기준(Arrivals of non-resident tourists at national borders, by country of residence).

자료: https://www.unwto.org/statistics(World Tourism Organization 홈페이지) 참고로 저자 작성.

프랑스 대중국 수출 같은 경우는, 2009년 프랑스 대중국 수출액은 109.43억 달러로 전년 대비 약 23.42억 달러 감소한다. 프랑스 총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려 소폭 증가하는 등 큰 변화는 없지만, 2007년부터 2014년까지의 수출액과 비중 변화 추이를 봤을 때 2009년 프중 무역 관계에 일정 부분 부정적 영향을 끼쳤음을 알 수 있다(구체적인 현황은 [그림 2-2] 참조).[37] 특히,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변수까지 고려하면, 대중국 수출액은 감소하였는데 비중은 오히려 증가하였다는 점이 프랑스 정치·경제에 끼친 '체감적' 영향이 작지 않았을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37) '달라이 라마 효과' 관련 연구에 의하면, 1991년에서 2008년 기간 달라이 라마 회담으로 인해 약 12.5%의 무역 감소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남. 이런 영향은 후진타오 집권 시기에 들어 더욱 두드려 짐. 또한, 고위직 인사와의 만담이 성사될 경우 그 정도는 더욱 강해져 16.09%의 수출량 감소를 가져온 것으로 분석됨. 마지막으로 '달라이 라마 효과'는 약 2년 정도 유지된 것으로 나타남. Andreas Fuchs and Nils-Hendrik Klann, "Paying a Visit: The Dalai Lama Effect on International Trade",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91(1), 2013, pp.164-177. 기업의 반응에 대해서는 Faqin Lin, Cui Hu, and Andreas Fuchs, "How Do Firms Respond to Political Tensions? The Heterogeneity of the Dalai Lama Effect on Trade", *China Economic Review*, 5(C), 2019, pp.73-93 참고 바람.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대중국수출액	12,424	13,285	10,943	14,551	18,745	19,383	19,573	21,469
비중	2.30	2.23	2.36	2.84	3.20	3.47	3.45	3.79

[그림 2-2] 프랑스 대중국 수출 현황(2007-2014년)

주: 비중은 전년도 대비 증감을 의미함.

자료: https://comtrade.un.org/(UN Comtrade Database 홈페이지) 참고로 저자 작성.

서울연구원 The Seoul Institute

4_프중 양국 분쟁 해결 과정과 특징

티베트 문제를 둘러싸고 '강 대 강'으로 부딪치는 와중에도 프중 양국은 소통의 끈을 놓지 않는다. 양국 모두 (비)공식적 협상을 통해 위기관리 하는 모습을 보인다. 관계 회복의 여지를 남기기 위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프랑스의 즉각적인 고위급 인사 파견

2008년 4월 '까르푸 불매운동'이 발생하자 프랑스는 즉시 고위급 인사를 중국에 파견하여 상황의 악화를 막고자 한다. 4월 21일 사르코지 대통령은 상원의장 크리스 티앙 뽕스레(Christian Poncelet)를 통해 상하이시 장애인 체육 훈련 센터에 있는 진징(金晶)에게 위로의 편지를 전달한다. 진징은 성화 봉송 도중 성화를 탈취하려는 친티베트 시위대로부터 성화를 지켜냈던 중국 장애인 펜싱선수로 이 사건 이후로 국가적인 아이콘이 된 인물이다.[38] 또한 상원의장은 7일 일정의 방중 기간 동안 후진타오 국가주석, 우방궈(吴邦国)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 그리고 자칭린(贾庆林)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주석 등과 연쇄 회담을 갖는다. 그는 티베트와 대만 등은 중국의 불가분한 영토이자 관련 문제는 내정(內政)이며,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힌다. 그리고 '프중 전면적 전략동반자 관계' 강화 의사를 전달하는 등 사태를 '관리'하고자 노력한다.[39]

4월 24일에는 장 피에르 라파랭(Jean Pierre Raffarin) 전 프랑스 총리가 사르코지 대통령의 서신을 가지고 중국을 방문하여 원자바오 총리 등 중국 고위급 인사들과 회담을 가진다. 그는 2003년 사스(SARS)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 중국을 방문한 첫 서방 선진국 지도자로 중국에서 우호적인 '중국통'으로 통하는 인물이다.[40] 이에 그치지 않고 프랑스는 4월 26일 장-다비드 레비트(Jean-David Levitte) 엘리제궁 외교 고

---

38) 구체적인 내용은 新华社(中央政府门户网站), 2008.04.22., "法国参议长蓬斯莱看望金晶并转交萨科齐总统信函", http://www.gov.cn/jrzg/2008-04/22/content_950765.htm 참고 바람.

39) 프랑스 정부는 중국의 주권과 영토완정도 존중한다는 의사를 피력함. 中国网, 2008.04.24., "胡锦涛:希望法方妥善处理两国关系新问题", http://www.china.com.cn/news/txt/2008-04/24/content_15010674.htm 참고 바람.

40) 올림픽 성화 봉송 사건에 유감을 표시함. 中华人民共和国外交部, 2008.04.24., "温家宝会见法国前总理拉法兰", https://www.fmprc.gov.cn/web/gjhdq_676201/gj_676203/oz_678770/1206_679134/xgxw_679140/t428653.shtml 참고 바람.

문을 특사로 중국에 파견하여 관계 개선을 다시 한 번 모색한다. 그는 다이빙궈(戴秉国) 외교담당 국무위원과의 회담에서 양국의 '전면적 전략동반자 관계'를 유지 및 강화하는 내용의 다섯 가지 항목에 합의한다. 4월 27일에는 시진핑(习近平) 국가 부주석, 왕자루이(王家瑞) 대외연락부장 등과 연쇄 회담을 갖고 티베트 관련 문제와 베이징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 등을 위한 의견을 나눈다. 이 자리에서 장-다비드 레비트 외교 고문은 프랑스는 중국의 발전을 환영하며, 티베트와 대만이 중국 영토의 일부분임을 인정한다. 또한, 베이징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한다.[41]

다른 한편, 2008년 4월 22일 주중 프랑스 대사관은 기자회견을 자청하여 달라이 라마에게 명예 시민권을 주기로 한 파리시 의회의 결정은 프랑스 정부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해명을 내놓는다. 또한, 집권당 대중운동연합(UMP) 대변인은 이는 베르트랑 들라노에(Bertrand Delanoe) 파리 시장이 자신의 국내 지지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선을 긋는다.[42]

2) 중국의 상황 악화 관리

중국 역시 프랑스와의 관계 악화가 자국에 이로울 것이 없다는 판단하에 일련의 조치를 취한다. 갈등 국면을 해소하기 위한 위기관리에 들어간 것이다. 2008년 4월 18일 후진타오 국가주석은 자오진쥔(赵进军) 전 프랑스 대사를 파견하여 사르코지 대통령에게 친서를 전달한다.[43] 4월 22일에는 중국 상무부가 직접 나서 까르푸 불매운동을 잠재우고자 노력한다. 상무부 관계자는 까르푸는 1995년 중국에 진출한 이후 122개의 매장을 오픈하였으며, 종업원의 약 99%에 해당하는 4만 명이 중국인일 뿐 아니라 전체 유통 상품의 95%가 중국산(연매출 약 300억 위안)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까르푸가 중국 경제 발전에 많은 공헌을 하였다는 점과 불매운동이 지속될 경우 결국 중국이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는 점을 국민들한테 호소한 것이다.[44]

---

41) 프랑스 외교 고문과 시진핑의 주요 대화는 新华网(搜狐网), 2008.04.27., "习近平: 中法关系凝聚几代领导人心血来之不易", http://2008.sohu.com/20080427/n256543101.shtml 참고 바람.

42) Deutsche Welle, 2008.04.22., "Dalai Lama Receives Parisian Citizenship, Requests US Help", https://www.dw.com/en/dalai-lama-receives-parisian-citizenship-requests-us-help/a-3283036.

43) 자오진쥔 전 프랑스 대사는 4월 18~22일 일정으로 프랑스를 방문하여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 외에, 크리스티앙 뽕스레 상원의장과 장 피에르 라파랭 전 총리, 그리고 장-다비드 레비트 외교 고문 등을 회견함. 다른 한편, 크리스 티앙 뽕스레 상원의장은 중국 전국인대의 요청(4월21~27일), 장 피에르 라파랭 전 총리는 중국인민외교학회 요청(4월24~27일)으로 방중한 것으로 확인 됨. 中国网, 2008.04.23., "胡锦涛主席特别代表赵进军访问法国", http://www.china.com.cn/international/txt/2008-04/23/content_14998873.htm.

44) 까르푸 포함 일부 프랑스 기업이 티베트 독립을 반대하고, 베이징 올림픽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힌 점도 함께 거론하며, 중국 정부 역시 환영하고 지지한다는 점을 밝힘. 中国广播网(搜狐网), 2008.04.22., "商务部: 家乐福超

3) 프중 양국의 (비)공식적 회담

2008년 7월 쿵취안 프랑스 주재 중국 대사의 발언이 직접적 발단이 된 양국 간의 마찰도 비록 항의성 조치였지만 프랑스는 쿵 대사를 외무부로 초치하여 입장을 전달하는 선에서 사건을 일단락 짓는다. 이와 관련하여 한 가지 주목할 부분은 쿵취안의 발언이 사르코지 대통령이 달라이 라마와 회동할 것이라는 의사를 중국 측에 전달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알려진 가운데 나왔다는 점이다. 즉, 제한된 정보로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없지만 프중 양국 간에 지속적인 협상이 있어왔음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7월 9일 G8 정상회담에서 프중 양국 정상 간 회동이 이루어진 점을 보더라도 그 가능성은 매우 높다.

다른 한편, 사르코지 대통령은 달라이 라마의 프랑스 방문 기간 회담을 취소함으로써 최대한 중국을 자극하지 않는다. 이 기간이 베이징 올림픽 기간과 겹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중국의 체면을 살려준 조치라고 할 수 있다. 베이징 올림픽이 폐막한 후 사르코지 대통령이 결국에는 달라이 라마를 회담하였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프중 모두 관계 개선의 여지를 남겨두는 선택을 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다. 특히, 사르코지 대통령은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 참가를 앞두고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는 듯 소위 '실용주의 리더십'을 보이기도 한다. 그는 8월 6일 신화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나는 중국과 프랑스 국민을 이어주는 따뜻한 친선의 메시지를 중국 측에 보낸다." 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등 불매운동으로 표출된 양 국가 국민들의 감정을 달래고자 하였다.

4) 프랑스의 '중국통' 특사 재파견과 다자회의 활용

프중 간의 소통은 2008년 12월 6일 사르코지 대통령이 달라이 라마를 회견한 후에도 빈번히 이루어진다. 비록 항의 차원이기는 하지만 12월 7일 허야페이(何亞非) 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에르베 라드수(Hervé Ladsous) 주중 프랑스 대사를 소환하여 항의한다. 중국 측의 항의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원자바오 총리가 '믿음의 여행'이라는 조치를 취하자 프랑스는 관계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자세를 보인다. 2009년 2월 8일 장 피에르 라파랭 전 총리는 다시 한 번 중국을 방문하게 되고, 7일 일정의 방중 기간 동안 양원창(楊文昌) 중국인민외교학회 회장(8일), 탕자쉬안(唐家璇) 전 국무위원(9일), 정쓰린(郑斯林) 전국인대외사위원회 부주임(9일), 리후이(李辉) 외교부 부부장(10

市所销售产品中95%为中国制造", http://news.sohu.com/20080422/n256458334.shtml 참고 바람.

일), 장즈쥔(张志军) 대외연락부 부부장(10일), 그리고 원자바오 총리(10일) 등과 연쇄 회담 갖고 양국 관계 회복을 위한 방안을 논의 한다.[45]

이 부분에서 한 가지 눈 여겨 볼 점은 사르코지 대통령이 제3국에서 달라이 라마를 회견하였다는 점이다. 사르코지 대통령과 달라이 라마는 폴란드 북부도시 그단스크(Gdansk)에서 개최된 폴란드 레흐 바웬사(Lech Walesa) 전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 25주년 축하 행사에서 회견한다.[46] 이 역시 프랑스 입장에서는 중국을 최대한 배려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티베트 사태를 둘러싸고 1여 년 동안 지속되었던 프중 양국 관계는 2009년 4월 1일(현지 시각) G20 금융정상회담 참석차 영국을 방문한 후진타오 중국 주석과 사르코지 대통령 간의 회동이 성사되면서 해빙무드에 접어들어 가게 된다. 같은 날, 프중 양국은 '프중성명'(Press Communiqué between China and France)을 통해 양국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음을 발표한다. 양국은 티베트 문제에 합의하였고, 프랑스는 향후 어떤 형식으로도 티베트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점을 밝힌다.[47]

그로부터 1년 7개월 뒤인 2010년 11월 후진타오 중국 주석은 프랑스를 방문하여 에어버스 항공기 102대 등 200억 달러 가량의 구매계약을 체결한다. 중국이 에어버스와의 최종협상 연기를 선언한 지 약 2년 만에 성사된 계약이다.

서울대학교 The Seoul Institute

---

45) 표면적으로는 장 피에르 라파랭은 중국인민대외우호협회 주최의 '중프 건교 45주년' 학술회 참석차 방문한 것으로 보도되었음. 그의 8일부터 14일까지의 구체적인 방중일정은 新华网, 2009.02.09., "法国前总理拉法兰访华媒体称其将修补中法关系", http://news.sina.com.cn/c/2009-02-09/034417174562.shtml 참고 바람.

46) 관련 구체적인 내용은 中国新闻网(中国经济网), 2008.11.14., "法国总统萨科齐称12月6日将在波兰会见达赖喇嘛", http://www.ce.cn/xwzx/gjss/gdxw/200811/14/t20081114_17377125.shtml 참고 바람.

47) 프중 갈등의 전개과정과 양국의 대응, 그리고 향후 전망에 대해서는 人民网(搜狐网), 2009.11.26., "李其庆: 中法外交风波与中国新时期外交", http://news.sohu.com/20091126/n268484680.shtml 참고 바람.

03

노중 노벨평화상 갈등과 중국의 경제보복

서울연구원
The Seoul Institute

1_노중 갈등 주요 전개 과정
2_중국의 정치·외교적 압박
3_중국의 경제보복과 영향
4_노중 양국 분쟁 해결 과정과 특징

03. 노중 노벨평화상 갈등과 중국의 경제보복

1_노중 갈등 주요 전개 과정

2010년 10월 8일 노르웨이 노벨위원회가 류샤오보를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선정하면서 노르웨이와 중국 양국 관계는 급속히 악화된다. 노벨위원회는 '중국의 근본적 인권을 위한 그의 오랜 비폭력 투쟁을 높이 평가한다'를 선정이유로 밝힌다. 당시 류샤오보는 광범위한 민주개혁을 요구하는 '08헌장' 작성을 주도한 혐의로 '국가권력 전복 선동죄'로 수감된 상태였다. 1989년 천안문 사태 당시 '천안문 사군자'로 불리기도 한 그는 중국 민주화 운동의 상징적 존재이기도 하였다. 이런 그가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선정되자 중국 정부는 즉각 반발한다. 그의 수상을 빌미로 중국의 민주주의와 인권 문제가 다시 한 번 국제적 논쟁거리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었다. 실제로 노벨평화상 발표가 난 이후, 세계 각국 지도자들은 한 목소리로 그의 석방을 요구한다. 노르웨이 정부 역시 10월 13일 AP와의 인터뷰를 통해, "우리 외교관들이 류샤를 만나려고 그의 아파트를 찾았으나 정문에서 공안에게 제지당했다" 면서 중국 당국이 류샤오보의 아내인 류샤(刘霞)를 가택연금 한 것을 강력히 비판하였다.[48]

중국 정부는 10월 8일 즉각 베이징 주재 노르웨이 대사를 불러 항의를 한다. 마자오쉬((马朝旭) 중국 외교부 대변인 역시 정례브리핑에서 류샤오보는 중국의 법률을 어긴 범죄인으로 그의 행위는 노벨평화상 취지와 맞지 않으며, 그의 수상은 양국 관계에 큰 손실을 가져올 수 있음을 경고한다.[49] 10월 9일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지인 환구시보(环球时报) 영문판 글로벌 타임스(Global Times)는 노르웨이 노벨위

48) 노르웨이 외무부 대변인의 구체적인 인터뷰 내용은 서울신문, 2010.10.15., "'류샤오보 갈등'에 노르웨이 역공",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01015018022 참고 바람.

49) 中华人民共和国外交部(中华人民共和国驻圭亚那合作共和国大使馆), 2010.10.08., "外交部发言人马朝旭答记者问", http://gy.chineseembassy.org/chn/zt/fyrth/t759532.htm.

원회를 '반중(反中)이라는 목표에 복무하는 정치적 도구(political tool)'라는 원색적인 표현까지 쓰며 비난한다.[50] 2010년 10월 14일에는 자국에 우호적인 노르웨이과학기술대학의 아르눌프 콜스타드(Arnulf Kolstad) 교수의 "2010년 노벨평화상을 류샤오보에게 준 것은 커다란 잘못"이라는 인터뷰 내용을 신화통신에 게재함으로써 우회적으로 비난하기까지 한다.[51] 더 나아가 노르웨이 오슬로 주재 중국대사관은 각국 사절에 서한을 보내 시상식 참석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한다.

양국 간의 갈등은 문화교류에도 영향을 끼친다. 중국은 11월 베이징과 후베이성(湖北省) 우한(武汉)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노르웨이 뮤지컬 '어떤 화창한 밤'(Some Sunny Night) 공연을 돌연 취소시켜 버린다.[52] 중국의 노벨평화상 시상식 방해공작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공자평화상'이라는 것을 급조하여 노벨평화상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모습까지 연출한다. 공자평화상위원회는 12월 8일 롄잔(连战) 전 대만 부총통을 첫 수장자로 발표하고, 노벨평화상 시상식 하루 전날인 12월 9일 행사를 진행한다. 노중 간의 갈등은 2012년에도 지속된다. 6월 12일 AFP 통신에 의하면 셸 망네 본데비크(Kjell Magne Bondevik) 전 총리의 세계교회협의회 총회 참석을 위해 신청한 중국비자가 거부당하는 일이 발생한다. 이는 일행 30명 중 유일하게 비자 발급이 거부된 것이다.[53]

2010년 10월 노벨위원회가 류샤오보를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선정하면서 불거진 양국 간의 충돌은 갈등을 반복하다가 2016년 12월 19일 뵈르게 브렌데(Børge Brende) 노르웨이 외무장관이 방중을 하면서 6년 만에 막을 내리게 된다. 뵈르게 보렌데 외무장관은 리커창(李克强) 총리, 왕이(王毅) 외교부장 등과 차례로 회동을 갖고, 관계정상화에 대한 성명을 발표한다.

---

50) 글로벌 타임스의 노벨위원회에 대한 구체적인 비판 내용은 Global Times, 2010.10.09., "2010 Nobel Peace Prize a disgrace", http://www.globaltimes.cn/content/580091.shtml 참고 바람.

51) 아르눌프 콜스타드 교수는 중국사회과학원에서 초빙연구원을 한 것을 포함하여 중국을 수차례 방문한 이력이 있는 친중파 학자인 것으로 알려져 있음. 한국 언론의 관련 보도는 연합뉴스, 2010.10.15., "中, '친중 노르웨이인' 동원 노벨상 비판", https://www.yna.co.kr/view/AKR20101015071900083 참고 바람.

52) 뮤지컬 주최 측 관계자는 류샤오보의 노벨평화상 수상에 대한 처벌 차원에서 취소한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인터뷰를 함. 구체적인 인터뷰 내용과 당시 노중관계 상황은 연합뉴스, 2010.10.13., "中, 노르웨이 뮤지컬 공연도 취소", https://www.yna.co.kr/view/AKR20101013091600009 참고 바람.

53) 중국 외교부 류웨이민(刘为民) 대변인은 나라마다 비자 정책과 방법이 다르다는 점을 들어 과도한 해석이라 주장함. 이는 역설적으로 중국 정부가 본데비크 노르웨이 전 총리에게 비자를 발급하지 않았음을 시인한 것으로 볼 수 있음. 비자 발급 거부와 관련한 구체적 내용은 헤럴드경제, 2012.06.14., "中 '뒤끝 작렬'..유치한 보복외교",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20614000323&md=20120617060215_BL 참고 바람.

2_중국의 정치·외교적 압박

노벨위원회의 발표 이전, 류샤오보의 노벨평화상 수상이 가져올 파장을 우려한 중국 정부는 여러 루트를 통해 반대 입장을 지속적으로 피력한다. 중국정부는 표면적으로는 노벨평화상과 중노 관계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실제로는 노르웨이정부의 결정으로 규정한다. 노벨위원회 위원 5명이 노르웨이 국회(Storting)에 의해 임명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유로 중국정부는 노르웨이 정부에 류샤오보 수상 불가 입장을 밝히며 압박한 것으로 전해진다. 대표적인 예로 중국은 자국 고위급 인사를 통해 노벨위원회 사무총장인 게이르 룬데스타드(Geir Lundestad)에게 경고한다. 사적인 만남이라는 형식을 빌려 노벨위원회의 잘못된 결정이 양국 무역거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우회적으로 전달함으로써 노르웨이 정부를 압박한 것이다.[54]

그 외에 중국 정부는 다른 국가로 하여금 시상식에 참석하지 못하게 회유와 압박을 동시에 가한다. 결과적으로 노벨위원회로부터 초청 받은 60여 개국 중 중국을 포함한 19개국은 불참하게 된다.[55]

중국은 외교부 대변인 정례브리핑을 통해서도 노벨위원회와 노르웨이 정부를 압박한다. 2010년 9월 28일, 장위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노벨의 유언에 따른 평화상은 민족 간 화목과 각국의 우의를 증진하고 군축에 기여했거나 평화를 위해 노력한 사람에게 주어져야 한다는 것,……, 기자가 언급한 그 사람은 중국 법률을 위반한 사람으로 그의 행동은 노벨상의 정신과 정반대"라는 답변으로 노벨위원회의 결정을 직접적으로 비난한다. 또한, "중국 헌법과 법률은 중국인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단) 표현의 자유는 중국의 법률 범위 내에서 보장돼야 하며 이는 어느 나라의 경우도 마찬가지"라며 인권을 빌미로 한 내정간섭을 차단하고자 한다.[56]

---

54) James Reilly, "China's Unilateral Sanctions", *The Washington Quarterly*, 35(4), 2012, p.128.

55) 러시아, 쿠바, 세르비아 등 불참을 결정한 국가들은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고려하였을 뿐 아니라 자국 반체제 인사 문제까지 불거지는 것을 우려함. 연합뉴스, 2010.12.10., "노벨평화상 오늘 시상식..어떻게 진행될까?",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04813053 참고 바람.

56) 장위 외교부 대변인의 구체적인 발언은 연합뉴스, 2010.09.28., "中 '류샤오보, 노벨평화상 정신과 정반대'",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04675380 참고 바람.

3_중국의 경제보복과 영향

2010년 10월 8일 노벨위원회가 류샤오보를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선정하자 중국정부는 앞서 설명한 사회문화 교류 중단과 정치적 조치 외에 노르웨이에 경제보복을 가한다. 중국의 대표적 경제보복 조치인 수산물 검역 강화와 어류 수입 제한을 중심으로 노르웨이의 경제적 피해 상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중국의 노르웨이산 수산물 검역 강화와 수입 제한

2010년 12월 8일 중국 정부는 곧바로 수도공항출입경검험검역국(首都机场出入境检验检疫局)에 노르웨이산 수산물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라는 지시를 내린다. 이 지시는 12월 13일부터 효력을 발휘하였다.

2011년 1월 28일에는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国家质量监督检验检疫总局)을 통해 '연어수입검역강화에 관한 간단한 공고'(关于加强进口三文鱼检验简易的公告)(총국 2011년 제9호 공고)를 발표한다. 이 공고는 모든 냉동양식연어에 대한 검역 강화를 지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실제로는 노르웨이산에 대한 검역 강화 조치였다. 이로 인해, 노르웨이산 연어 검역에 20일 이상 소용되는 사태가 발생한다. 다른 국가(무작위)에 비해 16-17일 더 걸린 것이다. 2011년부터(정확히는 2012년 말쯤)는 노르웨이산 연어 수입을 수입업자 1인당 10-30톤(기존 200톤)으로 제한한다. 다른 국가로부터의 수입은 최대 300톤까지 허락하는 것과 비교하면 그 제한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57]

이에 그치지 않고, 2014년 9월에는 노르웨이산 연어에 '전염성 연어 빈혈증'(ISA, Infectious Salmon Anaemia)을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검출되었다는 이유로 대가리, 아가미, 그리고 내장을 제거한 연어나 일부 가공 처리를 거친 연어를 제외한 기타 모든 종류의 노르웨이산 연어 수입을 금지시킨다.[58]

2015년 3월에는 연어 췌장병(PD, Pancreas Disease) 바이러스 검출을 이유로 쇠르

---

57) Xianwen Chen and Roberto J. Garcia, "Economic Sanctions and Trade Diplomacy: Sanction-busting Strategies, Market Distortion and Efficacy of China's Restrictions on Norwegian Salmon Imports", *China Information*, 30(1), 2016, pp.37-39.

58) 2014년 5월 선전만검험검역국(深圳湾检验检疫局)은 노르웨이로부터 수입한 저온대서양연어 중 전염성 연어 빈혈증 병균을 발견, 질검총국은 제24호 위험예비경보를 발동함. 环球网(新浪网), 2014.09.09., "中国拟禁止进口整条挪威三文鱼: 防ISA病毒传入", https://tech.sina.com.cn/d/2014-09-09/16549601602.shtml.

트뢰넬라그(Sør-Trøndelag), 트롬스(Troms), 그리고 노르란(Nordland) 세 지역으로부터의 연어 수입을 금지시킨다. 이 세 지역은 노르웨이 전체 연어 생산의 약 50%를 차지하는 곳들이다.[59]

2) 노르웨이 대중국 어류 수출 감소, 연어 수출 급감

중국의 연어수입 제한을 포함한 일련의 조치로 노르웨이의 대중국 수출은 일정 부분 타격을 받게 된다. 전반적으로 노르웨이의 대중국 수출 추이는 2011년을 기점으로 꺾이게 되고, 2012년 큰 폭으로 떨어진 다음, 2013년부터 점차 회복되기 시작하여 2014년도에 일시적으로 정상수준으로 돌아오게 된다. 하지만 노르웨이와 중국 간의 관계정상화가 더디어 지고, 중국이 재차 경제보복 조치를 취하자 양국 간 경제 상황은 2015년부터 다시금 악화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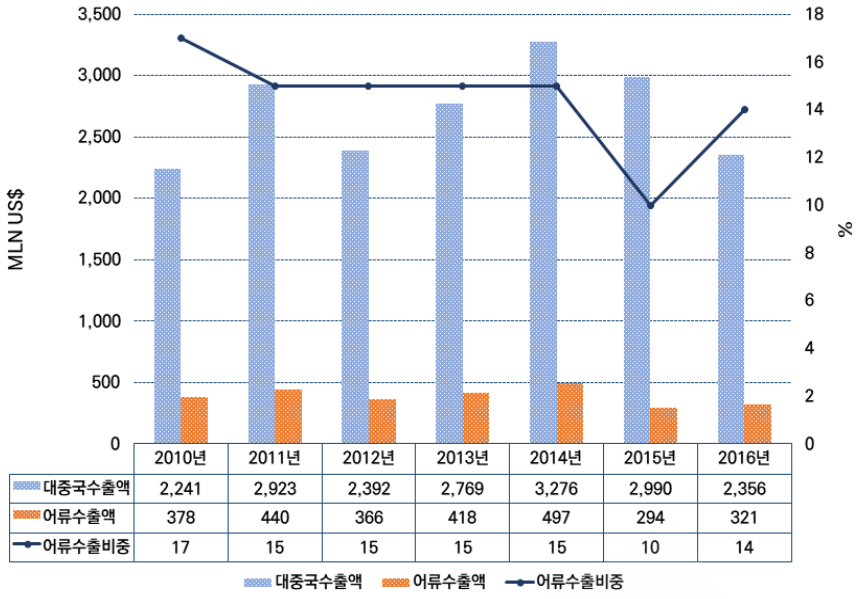
첫째, 노르웨이의 대중국 수출은 상기 기간 일정 규모 감소한다. [그림 3-1]에서 알 수 있듯이 2012년 노르웨이의 대중국 수출액은 23.92억 달러로 전년도 대비 5.31억 달러 감소한다. 노르웨이의 대중국 수출 상황을 2011년 수준을 유지했을 경우를 가정하여 살펴보면, 2011년에서 2014년 사이 약 3.22억 달러가 감소된 걸로 추정된다. 2010년을 기준으로 지난 5년간의 평균 증가율인 20%를 감안하면 그 손실액은 더욱 커져 약 30억 달러까지 감소된 것으로 추정되기도 한다.[60] 다른 한편, 노르웨이를 포함한 78개국과 비교분석해본 결과 노르웨이의 대중국 수출은 2011년 3%p, 2012년 22%p, 그리고 2013년에는 16%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2011년에서 2013년 사이에 7.8억 달러에서 13억 달러의 수출 감소를 의미하는 수치이다[61]. 양국 관계가 잠시 소강상태에 들어가면서 2014년 32.76억 달러까지 다시 증가하지만, 2014년과 2015년 중국이 재차 경제보복을 가하면서 노르웨이의 대중국 수출액은 2015년 다시 한 번 꺾이게 되고, 2016년 다시금 2012년 수준까지 떨어지게 된다.

---

59) 이 세 지역에 대한 연어 수입 금지 조치에 대해서는 Norway Today, 2018.07.06., "China repeals salmon ban", https://norwaytoday.info/finance/china-repeals-salmon-ban/ 참고 바람. 일반적으로 2015년 3월 중국의 조치를 경제보복 사례로 보지는 않음. 기존 연구 대부분 2014년 9월 조치를 제2차 경제보복으로 보고 그 영향을 분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노중 관계 정상화가 2016년 12월에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여, 2015년 조치까지 경제보복 사례로 보고 포함시켰음을 특별히 밝힘.

60) Ivar Kolstad, "Too Big to Fault? Effects of the 2010 Nobel Peace Prize on Norwegian Exports to China and Foreign Policy", *CMI Working Paper*, 3, 2016, pp.7-8.

61) Ivar Kolstad, "Too Big to Fault? Effects of the 2010 Nobel Peace Prize on Norwegian Exports to China and Foreign Policy", *International Political Science Review*, 41(2), 2019, pp.211-216.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대중국수출액	2,241	2,923	2,392	2,769	3,276	2,990	2,356
어류수출액	378	440	366	418	497	294	321
어류수출비중	17	15	15	15	15	10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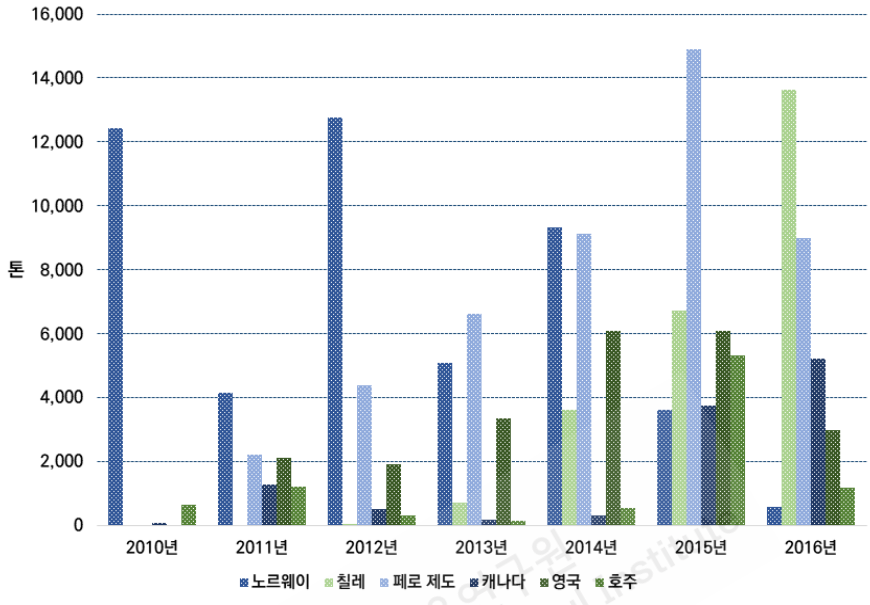
[그림 3-1] 노르웨이 대중국 수출 현황(2010-2016년)

자료: https://comtrade.un.org/(UN Comtrade Database 홈페이지) 참고로 저자 작성.

둘째, 노르웨이의 대중국 어류 수출 역시 2011년에서 2014년 사이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2010년 기준 어류는 노르웨이의 대중국 수출품목(export category) 중 약 3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중국의 경제보복 조치로 노르웨이의 대중국 어류 수출률 역시 2011년을 기점으로 상승 추세가 꺾이게 되고, 2012년 큰 폭으로 떨어진 이후 2013년부터 점차 회복되다가, 2015년 급감한다. 비록 2016년에 3.21억 달러 규모로 회복이 되지만 이는 중국이 경제보복 조치를 취하기 시작한 2010년보다 낮은 수준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2년 노르웨이의 대중국 어류 수출액은 3.66억 달러로 전년도 대비 7,400만 달러 감소한다. 2014년 다시 4.97억 달러로 회복하지만, 2015년 2.94억 달러로 급감한다([그림 3-1] 참조). 2011년 수출 수준을 유지했을 경우를 가정해 보면, 2011년에서 2014년 사이 약 6,000만 달러의 수출 감소가 있었고, 2005년에서 2010년 사이의 평균 수출 증가율 17.5%를 적용하면 5.85억 달러가 감소된 것으로 추정된다.[62] 다른 한편, 노르웨이를 포함한 36개국과 비교 분석해 보면, 2011년 6%p, 2012년 22%p, 그리고 2013년 10%p 정도 떨어진 것으로

62) Ivar Kolstad, "Too Big to Fault? Effects of the 2010 Nobel Peace Prize on Norwegian Exports to China and Foreign Policy", *CMI Working Paper*, 3, 2016, p.7.

나타난다. 그리고 2011년에서 2013년 사이 약 1.25억 달러에서 1.76억 달러 정도의 수출 감소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63]



[그림 3-2] 대중국 주요 연어수출국과 수출 현황(2010-2016년)

자료: Undercurrent News, 2017.05.25., "Norway targets $1.5bn seafood exports to China by 2025", https://www.undercurrentnews.com/2017/05/25/norway-targets-1-5bn-seafood-exports-to-china-by-2025/.

셋째, 중국의 경제보복으로 노르웨이의 대중국 연어수출은 큰 치명타를 입게 된다. 중국 내 노르웨이 연어 시장점유율은 2010년의 약 92%에서 2013년 상반기 기준 약 29%로 급감한다.[64] 중국이 노르웨이산 연어수입에 대한 제한 조치를 취한 그 다음해인 2011년 노르웨이의 대중국 연어수출량은 2010년의 12,434톤에서 4,154톤으로 급감한다. 비록 2012년 12,772톤을 수출하여 2010년 수준으로 회복되지만 1년 뒤인 2013년 다시금 5,095톤 규모로 급감한다. 이러한 수출량 감소로 노르웨이는 10

63) Ivar Kolstad, "Too Big to Fault? Effects of the 2010 Nobel Peace Prize on Norwegian Exports to China and Foreign Policy", *International Political Science Review*, 41(2), 2019, p.214.

64) Xianwen Chen and Roberto J. Garcia, "Economic Sanctions and Trade Diplomacy: Sanction-busting Strategies, Market Distortion and Efficacy of China's Restrictions on Norwegian Salmon Imports", *China Information*, 30(1), 2016, pp.32-41. 1997년에서 2010년 사이, 중국의 연어 총수입량 중 노르웨이산은 70% 이상을 유지함.

년간 유지해 온 대중국 연어수출 1위 자리를 내주게 된다. 2013년 페로 제도(Faroes)는 중국에 6,625톤을 수출하여 1위를 차지하게 된다. 2010년 당시 페로 제도의 대중국 수출량이 3톤에 불과했던 것을 감안하면 노벨평화상으로 인해 노르웨이가 받은 타격이 컸음을 확인할 수 있다.

노르웨이의 대중국 연어수출량 역시 2014년 9,343톤으로 회복이 되지만 2015년부터 다시 급감하기 시작한다. 2015년 3,609톤으로 줄어들었고, 2016년에는 598톤까지 떨어진다. 2011년 급감했을 때의 약 1/7 수준까지 떨어진 것이다. 이로 인해 2014년부터 대중국 연어수출을 증대한 칠레가 2016년 기준 13,625톤으로 1위국이 된다([그림 3-2] 참조).

결론적으로 중국의 노르웨이에 대한 경제보복 조치로 어류수출량을 포함한 대중국 수출량은 2012년 타격을 받은 이후 2014년을 기점으로 2011년 수준으로 회복된다. 즉, 류샤오보가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결정이 되면서 촉발된 중국 경제보복의 직접적인 영향은 2013년을 기점으로 점차 약화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하지만, 악화된 노중 양국 관계 개선이 더디어지면서, 또한 2014년과 2015년 중국이 다시금 노르웨이산 연어 수입을 금지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하면서 노르웨이의 대중국 어류수출량은 다시금 급감하게 된다.[65]

서울연구원 The Seoul Institute

65) '달라이 라마 효과'의 시각에서 중국과 노르웨이의 갈등을 분석한 연구는 Bjørnar Sverdrup-Thygeson, "The flexible cost of insulting China: Trade politics and the 'Dalai Lama effect", *Asian Perspective*, 39(1), 2015, pp.101-123 참고 바람.

4_노중 양국 분쟁 해결 과정과 특징

1) 고위급 교류 중단과 '무대응' 전략

류샤오보가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선정되자 노중 양국 고위급 회담 중단은 물론 비공식적인 회담도 개최되지 않는다. 두 국가 모두 예정된 협상을 중단하였을 뿐 아니라 장기간 (비)공식 고위급 회담을 갖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우선, 2010년 10월 13일로 예정되었던 양국 간의 어업협상이 중국 측에 의해 돌연 취소된다. 그 이후 양국 고위급 간 회담은 상당 오랜 기간 재개되지 않는다. 2011년 11월 노르웨이 외무부 대변인은 지난 12개월 동안 양국 간의 회담이 전혀 열리지 않았음을 공개적으로 밝힌다. 노르웨이 국회 재정위도 2012년 봄으로 예정되었던 방중 일정을 전격 취소한다.[66]

2012년 4월에는 중국 역시 원자바오 총리의 20일에서 27일 7일간의 북유럽을 포함한 유럽 방문 기간에 노르웨이를 '의도적'으로 방문하지 않는다. 당시 원자바오 총리는 아이슬란드, 스웨덴, 폴란드, 그리고 독일을 방문하여 양자 관계뿐만 아니라 이들 국가들과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67]

2) 노르웨이 신정부의 '친중' 정책과 중국 북극평의회 가입 지지

2010년 10월 이후 극도로 경직되어 있던 노중 양국 관계는 2013년 전후로 미묘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 노르웨이 정부가 중국의 북극이사회 옵서버 지위 획득을 지지한 것이다. 1월 21일 당시 외무장관이었던 에스펜 바르트 아이데(Espen Barthe Eide)는 중국의 북극평의회 정식 옵서버 지위 획득을 지지할 것임을 밝힌다. 결과적으로 중국은 5월 15일 북극평의회 각료회의에서 정식 옵서버 지위를 획득하게 된다. 2006년 신청 이래 7년 만에 거둔 성과이다.[68]

---

66) 노중 간 협상 및 회담 중단과 관련해서는 산업일보, 2017.04.06., "중국-노르웨이, 외교마찰로 빚어진 경색국면에서 정상화 합의까지", http://www.kidd.co.kr/news/191404 참고 바람.

67) 원자바오 총리의 유럽 방문 주요 성과로 ①우호관계 증진, ②우호협력 가속화, ③중국의 지속가능한 발전노선 설파 등을 꼽고 있음. 구체적인 내용은 新华网(中国日报网), 2012.04.28., "巩固传统友谊, 深化互利合作, 促进共同发展", http://www.chinadaily.com.cn/hqgj/2012wjbeu/2012-04/28/content_15172428.htm 참고 바람.

68) 중국의 북극평의회 가입 과정과 권한에 대해서는 新华社(中央政府门户网站), 2013.05.16., "中国, 印度等6国成为北极理事会正式观察员国", http://www.gov.cn/jrzg/2013-05/16/content_2403698.htm 참고 바람.

이에 더해 2013년 9월 대선에서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중시하는 중도보수연합이 승리하면서 대중국 정책 변화를 예고한다. 신임 총리 에르나 솔베르그(Erna Solberg)는 친중 성향의 뵈르게 브렌데를 외무장관으로 임명한다. 그리고 중국의 북극평의회 가입을 지지·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힌다. 가시적 성과로 2달 뒤인 12월 10일, '중국-노르웨이 북극연구센터'(The China-Nordic Research Center)가 상하이에 설립된다. 다른 한편, 2013년 12월 노르웨이는 자국이 소장하고 있던 원명원(圆明园)의 기둥 7개를 중국에 반환하기로 결정한다. 노르웨이 박물관은 중쿤(中坤)투자그룹 이사장 황누보(黄怒波)가 약 990만 위안(元)을 기증한다는 조건으로 반환에 합의한다. 당시 뉴욕타임즈(중문판)는 노중 양국 관계가 악화된 상황에서 이루어진 합의라는 점을 부각하였다.[69]

2013년 전후 나타나기 시작한 일련의 변화에서 다음 두 가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하나는, 노르웨이 정부가 기존의 '무대응' 전략을 버리고 중국 측에 '화해'의 메시지를 던졌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비록 양국 고위급 간 공식적인 회담은 끊어졌지만, 민간교류를 포함한 물밑 교섭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었다는 점이다. 특히, 북극연구센터 설립과 원명원 기둥 반환은 순수 민간교류로 볼 수 없는 측면이 강하다.

3) 노르웨이 정부의 '당근' 정책과 중국의 노르웨이 AIIB 가입 승인

노르웨이는 2014년 들어서부터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더욱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기 시작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3월 노르웨이는 중국의 복수국간서비스 협정(TISA, Trade in Services Agreement) 협상 참여를 공개 지지한다. 당시 중국이 미국 관계자들과 TISA 참여를 논의하고 있는 과정에서 노르웨이가 중국 참여를 지지하는 선언을 한 것이다. 2014년 3월 31일 뵈르게 브렌데 외무장관은 현재 전 세계 서비스 분야 무역의 약 70%를 차지하는 50개 국가가 협상에 참여 중인데, 만약 중국이 참여하게 되면 그 규모는 77%로 늘어날 것이며, 다른 국가들도 동참할 수 있다며 환영 의사를 밝힌다.[70] 이에 대해 중국은 노르웨이 외무장관이 중국은 서비스

---

69) 당시 노르웨이박물관측과 황누보는 이 협상을 순수 민간교류로 규정하지만, 양국 관계 개선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는 기대를 함께 표명함. 구체적인 내용은 纽约时报中文网, 2014.02.12., "圆明园七根石柱将从挪威'回家'", https://cn.nytimes.com/culture/20140212/t12relics/ 참고 바람.

70) 노르웨이 외무장관의 중국 참여 지지 관련 구체적인 발언은 Ministry of Foreign Affairs(Government.no), 2014.03.31., "Norway supports China's participation in Trade in Services Agreement talk", https://www.regjeringen.no/en/aktuelt/tisa-agreement/id754242/ 참고 바람.

무역의 거대 시장이며 전 세계 서비스 무역 분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말을 하였다는 보도로 호응한다.[71]

둘째, 노르웨이는 국립도서관 아카이브에서 발견된 1927년 작 중국 무성영화를 중국에 반환한다. 2014년 4월 14일 노르웨이 국립도서관은 중국 무성영화 '판쓰둥'(盘丝洞) 복사본을 15일 중국에 보낸다는 결정을 발표한다. 원명원 기둥에 이어 다시 한 번 문화재 반환이라는 선택을 한 것이다.

셋째, 2014년 5월 노르웨이 정부는 노르웨이를 방문하는 달라이 라마와 고위급 간의 모든 회담을 거부한다. 이는 노르웨이 고위급 인사가 달라이 라마와의 회담을 거부한 첫 번째 사례이다. 당시 에르나 솔베르그 노르웨이 총리는 뉴욕타임스 기자에게 노르웨이 정부의 이번 결정은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것임을 밝힌다. 당시 노르웨이 국내 여론조사 결과 '비겁한'(cowardly) 결정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약 50%를 차지하였다는 것을 고려할 때, 노르웨이 정부의 관계 개선 의지가 확고하였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72]

넷째, 노르웨이는 중국 주도로 설립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가입을 통해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 심화는 물론 중국의 대외전략에 힘을 실어준다. 2015년 3월 31일 노르웨이는 AIIB 가입(창립국가) 신청을 한다. 4월 14일 노르웨이는 창립회원국 지위를 획득하게 되고, 6월 29일 합의안에 서명한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4월 27일에서 28일 베이징에서 개최된 제4차 최우선협상회의(CNM, Chief Negotiators' Meeting)에 노르웨이가 참석을 한 사실이다. 2020년 3월 기준, 중국 주노르웨이 대사관 홈페이지 자료를 살펴보면 2010년 7월 28일을 마지막으로 2016년 12월 19일 노르웨이 외무장관의 방중 전까지 양국 고위급 간 공식적 회담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난다.[73] 하지만, 이를 통해 AIIB 가입과 관련하여 양국 간 긴밀한 소통과 협상이 있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또한, 중국이 노르웨이 가입을 '승인'한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중국 역시 노르웨이와의 관계 개선 의지가 확실히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71) 中华人民共和国驻挪威王国大使馆经济商务参赞处, 2014.04.22., "挪威公开支持中国参与 '服务贸易协定'(TISA) 谈判", http://no.mofcom.gov.cn/article/jmxw/201404/20140400558633.shtml.

72) The New York Times, 2014.05.07., "Norway's Leaders Snub Dalai Lama in Deference to China", https://www.nytimes.com/2014/05/08/world/europe/norways-leaders-snub-dalai-lama-in-deference-to-china.html?_r=0.

73) 상기 기간 중국과 노르웨이 사이의 공식적인 교류 상황은 中华人民共和国驻挪威王国大使馆, '中挪关系', http://www.chinese-embassy.no/chn/zngx/ 참고 바람.

4) 노르웨이 정부의 '채찍' 정책과 중국의 명확한 입장 표명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과정에서 노르웨이의 일방적인 '양보'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노르웨이는 이상에서 살펴본 '당근'(carrot) 정책과 함께 '채찍'(stick)도 사용한다. 일종의 압박외교를 펼친 것이다. 중국과 같이 '마지노선'을 설정하여 '정상적인' 관계정상화를 추구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르웨이 정부는 중국의 북극섬 매입 시도를 차단한다. 2014년 5월 22일 노르웨이 정부는 북극해 스발바르군도 내 216㎢ 대지를 사들이려는 황누보의 시도에 제동을 건다.[74] 2013년 노르웨이로부터 원명원 기둥 7개를 사들였던 중쿤투자그룹 이사장 황누보는 북극곰 관람 관광지 개발 등의 명목으로 이 땅을 구입하겠다고 제안한다. 하지만, 노르웨이 정부는 ①석탄 광산이 있는 산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 ②북극은 전 세계 미개발 원유 약 13%와 천연가스 약 30%가 매장된 자원의 보고라는 점, ③북극해항로에 취항하는 화물선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국고로 사들이겠다는 계획을 발표한다. 노르웨이 정부는 중국의 북극섬 매입 의도를 관광지 개발로 보지 않은 것이다. 이에 대해 모니카 맬란드(Monica Mæland) 통상산업부 장관은 중국이 천연자원 확보를 위해 투자처를 물색하고 있으며 스발바르군도를 북해 진출의 전진기지로 삼으려 한다며 '견제' 의사를 밝힌다.[75]

둘째, 노르웨이 정부는 중국의 스발바르군도 내 제3레이더 건설 허가를 취소한다. 2014년 10월 노르웨이 정부는 2010년 7월 건설 허가를 해 주었던 유럽비간섭산란과학연합(EISCAT, European Incoherent Scatter Scientific Association)의 제3레이더 건설을 취소한다. 이 결정에 대해 노르웨이 교육과학부는 중국이 우주 관련 연구를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이 기술이 다른 용도, 즉 정보활동 용도로 쓰일 가능성이 있다는 문제를 제기한다. 이는 레이더를 중국 과학자들이 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에 대해 노르웨이 과학기술대학교(Norwegian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의 스발바르 제도 역사 전문가 토르 비욘 알로우(Tor Bjørn Arlow)는

---

74) 중국은 스발바르 조약(Svalbard Treaty)을 근거로 자국을 북극지역의 이해관계당사국으로 규정하고 있음. 스발바르 조약은 1920년 2월 미국, 영국, 덴마크, 그리고 노르웨이 등 14개 국가가 체결한 조약으로 노르웨이와 북극점의 중간에 위치한 스발바르 군도에 대해 노르웨이의 영유권을 인정하는 대신, 조약 가입국과 그 국민의 차별 없는 광물채취, 상업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상호 권리를 인정하고 있음. 중국은 1925년 동 조약에 가입함. 구체적인 내용은 정규재, 최영선, "중국의 북극개발 진출 전략과 전망",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4-15호, 2014 참고 바람.

75) 노르웨이 정부의 구체적 입장에 대해서는 매일경제, 2014.05.23., "노르웨이 정부, 중국의 북극섬 매입 시도에 제동", https://www.mk.co.kr/news/world/view/2014/05/802241/ 참고 바람.

정부의 중국과의 관계 개선 의지에도 불구하고, 양국 사이의 '어려운 정치 풍토'(difficult political climate)로 인해 이러한 결정이 이루어졌다고 분석하였다.[76]

셋째, 노르웨이 정부는 중국의 전반적인 인권에 대한 우려를 공개적으로 표명한다. 노르웨이 외교부는 2014년 '인권' 백서에서 중국의 인권을 평가한다. 백서에 의하면, 중국에서 자의적으로 체포와 구금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양자 차원의 인권 문제에 관한 대화가 어렵다는 점을 밝힌다. 이런 이유로 노르웨이는 국제기구를 통해 중국의 인권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고 명시한다. 대표적인 예로, 노르웨이는 2013년 11월 유엔인권이사회의 보편적 정례검토(UPR)에 중국의 표현의 자유, 사형제, 그리고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비준 등에 관한 권고안을 제출한다.[77]

넷째, 2015년 1월 노르웨이 정부는 중국인 박사생을 '국가안보위협' 명목으로 추방한다. 2015년 1월 23일 노르웨이 남부 아그데르 대학(University of Agder)의 중국인 박사생 1명과 그의 지도교수인 이란계 독일인 1명이 추방되는 사건이 발생한다. 노르웨이 경찰은 두 사람을 노르웨이로부터 추방하였을 뿐 아니라 셍겐 지역(Schengen area) 출입을 금지하는 명령까지 내린다. 당시 노르웨이 경찰은 이 두 사람이 첨단 무기 기술, 특히 미사일 개발에 적용할 수 있는 풍력 발전을 연구한 점을 '죄목'으로 지적한다. 또한, 중국 인민해방군과의 연관 의혹도 제기된다.

2015년 2월 4일에는 노르웨이 경찰국이 매년 공개하는 '국가위협평가'(National Threat Assessment)에 처음으로 중국을 첩보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비동맹국으로 규정한다.[78] 이에 대해 중국은 노르웨이가 여전히 냉전시대 사고방식으로 국제관계를 보고 있다고 반발한다. 노르웨이 주재 중국대사관은 4월 4일 환구시보와의 인터뷰에서 노르웨이 정부의 결정을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이라 일축하며, 무책임한 발언에 놀랐다는 입장을 보인다. 홍레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 역시 중국학자들의 합법적인 권익과 학술의 자유를 확고히 수호해 유사한 사건이 다시금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촉구한다(我们对于这种不负责任的评论感到震惊，这是充满冷战色彩的指

---

76) 레이더 설치와 관련한 주요 내용은 Newsinenglish.no, 2014.9.12., "Norway won't let China build radar", https://www.newsinenglish.no/2014/09/12/norway-wont-let-china-build-radar/ 참고 바람.

77) Norwegian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pportunities for All: Human Rights in Norway's Foreign Policy and Development Cooperation", *Meld. St. 10(2014-2015) Report to the Storing(white paper)*, 2014.

78) Benjamin David Baker, 2015, "From China with Love: China, Norway and Espionage", *The Diplomat*.

控，而且毫无根据).[79] 중국 유학생 추방 사건은 노중 양국 간 교섭과 그해 9월 노르웨이 지방법원의 무혐의 판결로 일단락이 되지만, 스파이 사건을 둘러싸고 양국은 첨예하게 대립하였다.

서울연구원 The Seoul Institute

79) 중국인 유학생 추방과 국가위협평가에 대한 노르웨이와 중국의 구체적인 입장은 环球时报, 2015.02.06., "挪指责'中俄间谍威胁', 中方: 指控充满冷战色彩", https://world.huanqiu.com/article/9CaKrnJHxmq 참고 바람.

04

중국 경제보복과 프·노 양국 위기관리 특징

서울연구원
The Seoul Institute

1_중국 경제보복 목적과 행태적 특징
2_프·노 양국의 대중국 위기관리 특징

04. 중국 경제보복과 프·노 양국 위기관리 특징

1_중국 경제보복 목적과 행태적 특징

중국이 프랑스와 노르웨이와의 갈등과정에서 취한 경제보복을 비교분석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주요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4-1] 참조).

1) 경제보복 전, 정치·외교적으로 상대 압박

중국은 경제보복 조치를 취하기 전에 프·노 두 국가 모두에게 정치·외교적 압박을 가하였다. 중국 나름대로 사태를 얼마나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상대국에 전달한 것이다. 2008년 3월 티베트 사태로 인해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 보이콧 문제가 발생하자, 중국은 외교부 대변인 브리핑과 관영매체를 통해 자국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다. 8월과 12월 달라이 라마 회담 문제가 불거지자 외교부 차원의 대변인 브리핑뿐 아니라 주프랑스 중국대사가 직접 나서 경고를 하였고, 제11차 중-EU 정상회담을 연기하는 특단의 모습까지 보인다.

노르웨이와의 사례에서는 수상자 발표 전, 중국은 프랑스 사례와 같이 외교부 대변인의 브리핑 외에 고위급 인사를 파견하여 사적 만남의 형식으로 노벨위원회 사무총장을 압박하는 모습을 보인다. 또한, 다른 국가로 하여금 시상식에 참석하지 못하게 회유와 압박을 동시에 가하는 정책을 펼치기도 한다. 수상자 발표를 한 후에는 실질적으로 노르웨이를 압박한다. 지속적인 외교부 대변인 브리핑과 관방매체 논평에 더해, 2010년 10월로 예정되었던 양국 간 어업협상을 취소시킨다. 11월에는 노르웨이 뮤지컬 공연이 취소되는 사건이 발생한다. 심지어 노벨위원회의 권위를 추락시키고자 '공자평화상'을 급조하여 노벨평화상 시상식 하루 전날 행사를 강행하기도 한다.

2) 자국 경제피해 최소화 위해 '보이콧' 방식 선택

중국은 금수조치(embargoes)와 금융제재(financial sanctions)보다는 보이콧 방식을 주로 선택하였다. 상대국 생산 특정 핵심 물품(자) 수입을 제한하는 것이 경제보복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다고 판단한 결과이다. 이는 한편으로는 경제보복의 목적을 경제적 타격이 아닌 정치적 압박에 두었기 때문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수입 금지 위주의 경제보복으로 자국 경제에 끼칠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결정이라 할 수 있다.

프랑스 사례에서는 중국 정부의 '묵인'하에 대표적인 소비자 주도 보이콧인 불매운동이 전국적으로 일어난다. 프랑스 국민들의 경제보복 '체감도'를 극대화하기 위해 프랑스 관광 금지 명령까지 내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정부의 입장 변화가 없자, 중국 정부는 에어버스와의 항공기 판매 최종 협상을 일방적으로 연기시켜 버린다. 이에 그치지 않고, 중국 정부는 정치적 압박을 최대화하기 위해 유럽순방 일정에서 프랑스를 의도적으로 제외시키고 유럽 다른 국가들과 총 150억 위안 규모의 38개 협정을 맺는다.

노르웨이와의 갈등에서는 베이징 정부(표면적으로)가 나서 2010년 노르웨이 대중국 수출 품목 중 약 3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노르웨이 수산물에 대한 검역 강화와 수입 규모를 제한한다. 그리고 2014년과 2015년 특정 품목과 지역으로부터의 연어 수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내린다.

3) 제한적 경제보복으로 직접적 경제타격 최소화

중국은 양국 경제관계를 크게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제보복 조치를 취하였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상대국을 장기간 경제고립 시킴으로써 막대한 손실을 입히게 하는 것과 달리, 중국의 경제보복은 상대적으로 단기적이고 제한적이었다.[80] '보이콧' 수단을 선택한 것과 같은 이유로 경제보복의 핵심 목적이 경제적 타격이 아닌 정치적 압박에 있고, 자국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시키겠다는 계산의 결과이다.

이런 연유로 프랑스와 노르웨이의 대중국 수출 감소폭도 크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 기간도 1년 정도로 길지 않았다. 우선 프랑스의 대중국 수출은 2009년 전년도 대비 약 23.42억 달러 감소한다. 하지만, 프랑스 총수출 중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려 증가

80) James Reilly, "China's Unilateral Sanctions", *The Washington Quarterly*, 35(4), 2012, p.123.

한다. 이뿐만 아니라 2010년 145.51억 달러를 수출하여 2008년 수준 이상으로 회복한다. 프랑스 방문 중국 거주자 수 역시 2008년과 2009년 각각 전년도 대비 6%와 5% 감소하였지만, 2010년 14% 증가하여 2007년 수준을 회복한다.

노르웨이 사례 같은 경우도 대중국 수출이 2012년과 2015년 전년도 대비 각각 5.31억 달러와 2.86억 달러 감소하였지만, 지속적인 수출액 하락이 아닌 등락을 반복하는 특징을 보인다.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어류 수출, 특히 연어 수출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물론, 연어 수출은 직접적인 타격을 받아 중국 시장점유율이 2010년 약 92%에서 2013년 상반기 약 29%로 급감하고, 10년간 유지해온 대중국 연어 수출 1위 자리를 2013년과 2015년에는 페로 제도, 2016년에는 칠레에 내주게 된다. 하지만, 노중 양국 경제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어류가 대중국 총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0년 기준 약 17% 정도였고, 연어는 그 중에서도 약 10.4%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이는 총수출에서 약 3%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4) 통제 가능한 범위 내 불매운동 등 국내시위 허용

중국은 소비자 중심 불매운동 등의 국내시위를 통제 가능한 범위 내에서만 허용하였다. 상대국 압박 수단으로 불매운동을 조장한 측면도 있지만 사태가 커지는 것 역시 경계한 것이다. 특히, 양국 관계가 감정적으로 심하게 훼손되는 것은 물론 반정부 시위로 변질되는 것을 심히 우려하였다. 2008년 '까르푸 불매운동' 초반 중국 정부는 이를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것으로 규정하다가 사위가 전국적으로 급속히 퍼지자 '이성적 애국심'을 요구하기 시작한다. 당시 인민일보는 국가핵심이익까지 거론하며 과격한 시위 자제를 촉구하였다.

이에 반해 중국 정부는 2010년 노르웨이와의 갈등 과정에서는 처음부터 매우 신중한 태도를 보인다. 중국 정부는 관련보도 금지와 인터넷 검열로 소비자 주도의 보이콧을 원천 봉쇄해 버린다. 해외에서 불거진 중국의 인권문제와 공산당 일당체제에 대한 비판이 반정부 시위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유사 인권 이슈인 2008년 프랑스 사례로부터 '긍정적 학습'(positive learning)이 이루어진 결과라고 추측할 수 있다.

5) 특정 정치·외교적 목적 달성 전, 경제보복 카드 지속 사용

중국은 특정 정치·외교적 목적을 달성하기 전까지 경제보복 조치를 중단하지 않았다.

중국의 이러한 정책적 선택은 경제보복의 기본 목적에 부합할 뿐 아니라, 앞서 설명한 목적이 경제적 타격이 아닌 정치적 압박에 있음을 확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2008년 프랑스와의 갈등 사례에서 중국은 사르코지 대통령이 달라이 라마 회담을 포함한 티베트 사태를 지속적으로 거론하자 세 번에 걸쳐 경제보복을 가한다. 중국은 그 수위를 점차 높였을 뿐 아니라 정치·외교적 압박과 연계하여 프랑스의 입장 변화를 '강요'하였다.

상대적으로 단기적 경제보복으로 끝난 프랑스 사례와 달리 노르웨이와의 갈등은 목적 달성 여부에 따라 중국의 경제보복이 장기화될 수 있음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다. 중국은 노르웨이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와 태도 변화가 없자 2010년에 이어 2014년과 2015년 다시금 노르웨이산 어류(특히, 연어) 수입을 제한한다. 또한, 그 과정에서 중국 비자 발급 제한과 유럽순방 중 노르웨이 제외 등의 정치·외교적 압박 카드를 동시에 사용한다. 이로 인해, 노중 양국 간의 관계 정상화는 2016년 12월에야 비로소 이루어지게 된다. 프중 양국 간 '프중성명'이 1년 만에 나온 것에 반해 노중 관계 정상화는 6년이나 걸린 것이다. 이 부분에서 주목할 점은 2016년 12월 19일 관계 정상화 성명이다. 4개 항으로 된 양국 성명을 보면 노르웨이가 중국에 많은 '양보'를 하였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81] 제1항과 제4항이 일반적인 내용인 것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중국의 요구 사항을 상당부분 수용하였다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2항)양국의 관계 악화 원인을 노벨평화상 사건에 있음을 명확히 지적하며, 노르웨이가 중국의 입장과 중대 관심사가 무엇인지 충분히 인식하게 되었음을 명시한다. 이뿐만 아니라, (제3항)노르웨이는 향후 중국의 발전노선과 사회제도를 존중할 것이고, 중국의 주권과 영토완정 존중은 물론, 핵심이익과 중대 관심사를 고도로 중시할 것임을 밝힌다. 더 나아가 어떠한 중국의 핵심이익과 중대 관심사를 훼손하는 행위를 지지하지 않을 것임을 명확히 한다.[82]

---

81) 노르웨이 외무장관의 중국 방문과 양국의 관계 정상화에 대해서는 중앙일보, 2016.12.20., "중국, 핵심이익 침해한 노르웨이에 6년 만에 화해", https://news.joins.com/article/21023375 참고 바람.

82) 中华人民共和国外交部, 2016.12.19., "中华人民共和国政府与挪威王国政府关于双边关系正常化的声明(全文)", https://www.fmprc.gov.cn/web/ziliao_674904/1179_674909/t1425299.shtml.

[표 4-1] 중국 경제보복의 주요 행태적 특징

경제보복 특징	프랑스	노르웨이
경제보복 전, 조기 경고 (정치·외교적 압박)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 보이콧) • 외교부 대변인 브리핑 • 관영매체 논평	(수상자 발표 전) • 사적 만남 형식으로 노벨위원회 사무총장 압박 • 다른 국가 시상식 참석 방해 • 외교부 대변인 브리핑
	(8월, 12월 달라이 라마 회담) • 주프랑스 중국대사 기자 회견 • 외교부 대변인 브리핑 • 정상회담 연기 • 여론조사	(수상자 발표 후) • 외교부 대변인 브리핑 • 관방매체 논평 • 어업협상 취소 • 문화교류 중단: 뮤지컬 공연 • '공자평화상' 급조
보이콧 방식 선호 (경제적 피해 최소화)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 보이콧) • 불매운동 • 프랑스 관광 '금지령'	• 노르웨이산 수산물 검역 강화 • 노르웨이산 연어 수입 규모 제한 • 특정 지역 연어 수입 제한
	(8월, 12월 달라이 라마 회담) • 항공기 판매 최종협상 연기 • 유럽순방, 프랑스 제외	
단기적·제한적 타격 (경제적 피해 최소화)	• 프랑스 방문 중국거주자 감소 : 2008년 6%⇩, 2009년 5%⇩ • 프랑스 대중국 수출 감소 : 2009년 23.42억 달러⇩ : 2009년 비중 0.13%⇧	• 대중국 수출 감소 : 2012년 5.31억 달러⇩ : 2015년 2.86억 달러⇩ • 어류 수출 감소 : 2012년 7,400만 달러⇩ : 2015년 2.03억 달러⇩ • 연어 수출 감소 : 2011년 8,280톤⇩ : 2013년 7,677톤⇩ : 2015년 5,734톤⇩
		• (2010년 기준) 대중국 수출 : 어류 비중 약 17% : 어류 중 연어 비중 약 10.4% : 연어 비중 약 3%
불매운동 통제 (시위 변질 차단)	• 초반: '까르푸 불매운동' 등 허용, 합리적·합법적 시위로 규정 • 후반: 이성적 애국주의 요구	• 인터넷 금지, 관련보도 차단 : 보이콧 원천 봉쇄

서울연구원 The Seoul Institute

경제보복 특징	프랑스	노르웨이
목적 달성 전, 경제보복 지속	• 단계적 경제보복 수준 높임 : ①소비자 주도 보이콧/관광금지 → ②항공기 판매 최종 협상 연기 → ③유럽순방, 프랑스 제외 • 정치·외교적 압박과 연계 : ①외교부 대변인, 관영매체 입장 표명(대외 비판, 대내 통제) → ②중국대사 기자회견, 외교부 대변인 입장표명, 정상회담 연기(경제보복 직접 언급) → ③수교 기념식 행사 취소, 사이버 공격, 외교적 고립	• 3차례 어류(연어) 수입 제한 : 2010년 수산물 검역 강화 수입량 제한 : 2014년 '전염성 연어 빈혈증' 문제 제기, 수입 종류 제한 : 2015년 '연어 췌장병' 문제 제기, 수입 지역 제한 • 정치·외교적 압박과 연계 : 중국비자 발급 제한 : 유럽순방, 노르웨이 제외

자료: 저자 작성.

서울연구원 The Seoul Institute

2_프·노 양국의 대중국 위기관리 특징

프랑스와 노르웨이가 중국과의 갈등 과정에서 취한 '위기관리'를 비교분석해 보면,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사용하였음을 발견할 수 있다. 주요 특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프랑스의 적극적인 협상과 '체면' 외교

티베트 사태를 둘러싼 중국과의 갈등 속에서 프랑스가 보인 가장 두드러진 위기관리 특징은 적극적인 협상과 프중 양국 모두의 '체면치레'가 가능하도록 한 정치적 조치이다.

(1) 신속한 고위급 파견과 '꽌시' 활용

2008년 4월 '까르푸 불매운동'이 터지지 말자 프랑스는 고위급 인사를 연이어 중국에 파견하여 중국 고위급 간의 '소통채널'을 확보한다. 한 가지 눈여겨볼 부분은 프랑스가 파견한 인사들의 직함이다. 프랑스는 엘리제궁 외교 고문 장-다비드 레비트뿐 아니라 상원의장 크리스 티앙 뽕스레와 장 피에르 라파랭 전 총리 등에게도 '특사'임무를 부여한다. 사태 악화를 방지하고 관계 개선을 위해 행정부뿐 아니라 입법부 인사, 심지어 전직 인사까지 전면에 내세운 것이다.[83]

다른 한편, 장 피에르 라파랭 전 총리를 2008년 4월에 이어 2009년 2월에 재차 파견한 것 역시 주목할 부분이다. 중국 내에서 '중국통'으로 평가받는 친중 성향의 전직 인사 파견을 통해 우호적인 분위기 조성은 물론 자칫 '감정싸움'으로 번질 수 있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한 것이다. '꽌시'(关系)를 중시하는 중국문화 특징을 위기관리에 부분적으로 투영하였다고 할 수 있다.[84]

(2) 상호 '체면' 중시 전략

'체면'(面子)외교 역시 '꽌시'외교와 함께 프랑스가 중국과의 갈등 과정에서 보여준 중

---

83) LVMH그룹의 신속한 입장 표명도 '까르푸 불매운동'을 진정시키는데 일정부분 영향을 끼쳤다고 할 수 있음.

84) 장 피에르 라파팽 전 프랑스 총리는 중국에서 '중국인민의 오래된 친구'(中国人民的老朋友) 칭호를 받는 인물임. 그는 2019년 9월 중국정부로부터 '우정훈장'(友谊勋章)을 수여 받기도 함. 중국 관련 그의 행적과 중국 언론의 그에 대한구체적인 평가는 中国新闻网(新浪网), 2020.02.12., "'非典'曾如期访华 法国前总理拉法兰今为武汉加油", https://mil.news.sina.com.cn/2020-02-12/doc-iimxxstf0775345.shtml 참고 바람.

국 문화 요소를 고려한 정치적 결정이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베이징 올림픽 기간 프랑스를 방문한 달라이 라마와 회담하지 않으면서 중국의 체면을 살려준다. 티베트 사태로 개막식 보이콧을 앞장서서 주장했던 프랑스지만 중국인의 자국 발전에 대한 자부심이 투영된 메가 이벤트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는 하지 않은 것이다. '체면'을 그 누구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중국인의 특성을 감안한 결정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프랑스가 중국의 '체면'만을 살려준 것은 아니다. 8월 달라이 라마의 프랑스 방문 기간 대통령 영부인, 외교부 장관, 그리고 사회당 지도자 등이 달라이 라마와 회견한다. 그리고 사르코지 대통령이 수차례 공언(公言)한 것처럼 12월 달라이 라마와 회담한다. 인권 중시와 달라이 라마 회담 계획이 공언(空言)이 아니었음을 보여준 것이다.

(3) 다층적 정치 압박

프랑스가 중국과의 갈등 과정에서 소위 말하는 '당근'만 사용한 것은 아니다. 중국의 인권 문제와 티베트 이슈를 지속적으로 거론하고 '정치화'시킴으로써 중국을 압박하였다. 우선 티베트 사태가 발생하자 프랑스는 EU 차원의 대응 문제로 확장시킬 것임을 공표한다. 실제로 4월 10일 유럽의회는 유럽연합 27개 회원국 지도자들이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 보이콧을 하도록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시킨다.

4월 21일에는 파리시가 시의회에 달라이 라마에게 명예시민 호칭을 부여하는 결의안을 제출한다. 심지어, 같은 날 시의회는 중국인 인권운동가 후지아에게 명예시민 호칭을 수여하는 안건까지 통과시킨다. 까르푸 불매운동이 발생한 이후, 중앙정부가 '당근' 위주의 정책으로 전환하면서 발생하게 되는 전략적 공백을 지방정부가 나서서 '메우는' 모습이 연출된 것이다. 4월 22일 주중 프랑스 대사관이 나서 파리시의 결정은 프랑스 정부와는 전혀 관련 없는 독자적 행동이라 규정하지만, 중국 측 입장에서는 '차이가 없는' 정치적 압박으로 느낄 수밖에 없다. 오히려, 압박의 주체가 다원화되면서 압박의 정도는 배가 되었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위기관리 측면에서 보면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 보이콧, 8월 달라이 라마 회담, 12월 달라이 라마 회담 자체가 프랑스 정부의 대중국 정치적 압박 수단이었다고 할 수 있다. 즉, 프랑스는 중국과의 적극적인 협상 과정에서도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 보이콧과 달라이 라마 회담 계획을 지속적으로 발표하면서 중국에 '채찍'을 사용한 것이다.

(4) 다자무대를 소통 창구와 협상의 장소로 활용

프랑스는 다자무대를 중국과의 중요 소통 창구이자 협상의 장소로 활용하는 특징을 보인다. 초기 EU 사례와 같이 대중국 압박 수단으로만 다자기구를 활용한 것은 아니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7월 9일 G8 정상회담에서 후진타오 국가주석에게 개막식 참석 의사를 전달한다. 양국 관계 정상화 역시 2009년 4월 1일 G20 금융정상회담 참석차 영국을 방문한 후진타오 국가주석과 사르코지 대통령 간 회동이 성사되면서 이루어진다. 양국 갈등으로 프중 모두 국가 원수의 방문이 안고 있는 정치적 리스크를 다자무대를 통해 해소한 것이다.

2) 노르웨이의 '맞대응'전략과 반관반민 '압박외교'

노르웨이가 중국과의 갈등 과정에서 보여준 위기관리는 프랑스와는 사뭇 다른 형태를 보인다. 노벨위원회의 류샤오보 노벨평화상 수상자 결정을 '철저히' 비정부 행위로 규정하고 관계 개선 과정에서 이 문제 자체를 해결하기 위한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1) 비정부 행위 규정과 '맞대응'전략

노르웨이 정부는 노벨위원회의 결정을 비정부 행위로 규정한 만큼 스스로를 분쟁 해결의 주체로 설정하지 않는다. 분쟁 해결을 위해 중국에 고위급을 파견한다든지 혹은 다자무대를 통해 소통 채널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다. 이로 인해 사건 발생 후 1년 동안 노르웨이와 중국 간에는 공식적인 회담이 열리지 않는다. 심지어 중국 주노르웨이 대사관 홈페이지 자료를 살펴보면, 2010년 7월 28일을 마지막으로 2016년 12월 19일 노르웨이 외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하기 전까지 양국 고위급 간 공식적 회담은 없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 사건에 대해 노르웨이 정부는 최소한 표면적으로 '무대응' 전략을 펼친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노르웨이 정부는 중국의 어업협상 취소에 '맞대응'(tit for tat)하는 전략을 선택한다. 노르웨이 국회 재정위 역시 2012년 봄으로 예정되어 있던 방중 일정을 취소해 버린 것이다. 결국 4월 원자바오 중국 총리의 유럽 순방 기간 노르웨이가 '의도적'으로 배제되는 일이 발생해 버리지만, 노르웨이도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맞서는 모습을 보인다.

(2) 노르웨이산 어류 검역 강화 WTO에 문제 제기

노르웨이 정부는 중국이 노르웨이산 수산물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자 2011년과 2013년 WTO에 문제를 제기한다. 노르웨이는 2011년 1월 중국 정부가 발표한 '연어수입 검역강화에 관한 간단한 공고'를 문제시 삼으며, 노르웨이산에 대해서만 검역을 엄격히 하는 것에 대한 답을 중국 측에 요구한다. 특히, 당시 중국이 왜 검역 기준을 바꾸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이는 WTO 규칙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85]

(3) '반관반민' 문화외교 실시

노르웨이는 2013년과 2014년 자국이 소유하고 있던 원명원 기둥 7개와 무성영화 '판쓰둥' 복사본을 반환한다. 원명원은 1860년 영프 연합군에 의해 방화, 강탈된 중국 '백년국치'(百年国耻)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건축물이다. 중국의 영광과 치욕의 역사가 함께 깃들어 있는 곳으로, 전 세계 흩어져 있는 원명원의 유적 회수는 민족의 자존심 문제로 인식된다. 1920년대 '판쓰둥' 무성영화 역시 중국의 4대 명작 『서유기』 관련 작품으로 중국인의 자국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투영되어 있다. 즉, 노르웨이는 중국 근대사의 치욕과 관련된 문화재를 반환함으로써 중국인의 감성을 자극하는 일종의 '문화외교'를 펼친 것이다.

이와 함께, 눈여겨볼 부분은 원명원 기둥과 무성영화 반환이 노르웨이 정부가 아닌 '반관반민' 기관이라 할 수 있는 노르웨이 박물관과 국립도서관에 의해 이루어진 점이다. 자칫 정치적으로 보일 수 있는 문화재 반환을 '반관반민' 기관이 주체가 되어 추진함으로써 '까르푸 불매운동' 등으로 악화된 '중국인민의 감정'(中国人民的感情)을 어느 정도 치유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86]

(4) 레드라인에 근간한 '당근'과 '채찍' 압박외교

2013년 전후, 특히 중도보수연합 정부가 들어서면서 노르웨이는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압박외교를 펼친다. 일종의 '성의 표시'로 중국이 원하는 것을 주도적으로 들어줌과 함께 자국의 국가이익에 반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단호한' 모습을

---

85) Xianwen Chen and Roberto J. Garcia, "Economic Sanctions and Trade Diplomacy: Sanction-busting Strategies, Market Distortion and Efficacy of China's Restrictions on Norwegian Salmon Imports", *China Information*, 30(1), 2016, pp.37-38.

86) 중국 대외정책에서 '중국인민의 감정' 개념의 함의에 대해서는 张清敏, 李跃窥, "中国对外行为的思想根源探析", 「外交评论」, 第28卷, 第4期, 2011, pp.6-14 참고 바람.

보인다. 중국에게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노르웨이 나름대로의 '건강한 관계' 구축을 위한 '길들이기'를 하였다고 할 수 있다.

[표 4-2]에서 알 수 있듯이, 노르웨이는 유사 이슈에 대해 사안에 따라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사용한다. 북극개발과 관련해서 참여와 연구 차원은 가능하지만, 경제적 손실과 정치적 문제로 변질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제동을 건다. 인권 이슈 역시 노르웨이 고위급의 달라이 라마 회담 거부 같은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중국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지만,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중국의 인권 문제에 우려를 표명하는 역할은 그대로 수행하는 모습을 보인다. 또한, 박사생 추방 사건처럼 자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매우 단호한 입장을 보이기도 한다. 즉,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무원칙적으로 모든 이슈에서 일방적으로 양보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표 4-2] 2013년 이후 노르웨이의 이슈별 압박외교 현황

이슈	성질	조치
북극개발	당근	• 2013년 1월, 중국 북극평의회 정식 옵서버 지위 획득지지 • 2013년 12월, 중국-노르웨이 북극연구센터 설립
	채찍	• 2014년 5월, 스발바르군도 대지 구입 시도 제동 • 2014년 10월, 스발바르군도 내 제3레이더 건설 허가 취소
문화재	당근	• 2013년 12월, 원명원 기둥 7개 반환 • 2014년 4월, 무성영화 '판쓰둥' 복사본 반환
TISA	당근	• 2014년 3월, 중국의 TISA 협상 참여 공개 지지
인권	당근	• 2014년 5월, 고위급 달라이 라마 회담 거부
	채찍	• 2013년 11월, 유엔인권이사회에 권고안 제출 • 2014년, 인권 백서 발간, 중국 인권 상황 우려 표명
스파이	채찍	• 2015년 1월, '국가안보위협' 명목 중국인 박사생 추방
AIIB	당근	• 2015년 3월, 가입 신청

자료: 저자 작성.

05

대중국 통합적 위기관리 전략

서울연구원
The Seoul Institute

1_프중, 노중 갈등의 정책적 시사점
2_통합적 위기관리 전략적 방향

05. 대중국 통합적 위기관리 전략

프중과 노중 갈등 과정에서 중국은 유사한 경제보복 특징을 보인다. 국제위기인 만큼 중국 역시 목적 실현과 분쟁 해결을 위해 위기관리를 한 것이다. 이에 반해, 프랑스와 노르웨이는 중국공산당 합법성(혹은 정치체제)과 직결된 인권이라는 유사 이슈에 대해 다소 다른 위기관리 형태를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두 사례에서 중국이 유사한 위기관리 형태를 보인 점과 노르웨이가 중국과의 분쟁 해결 과정에서 2년 전 발생한 프중 갈등의 핵심 이슈였던 달라이 라마 회담을 관계 개선의 카드로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중국뿐 아니라 상대국들도 중국의 경제보복에 대한 '학습'이 이루어졌음을 추측할 수 있다. 즉, 중국이 '직접 학습'(direct learning)을 통해 경제보복을 포함한 위기관리 기술을 수정·보완하였다면, 상대국은 '간접 학습'(indirect learning)과 '진단 학습'(diagnostic learning)을 통해 중국을 상대하는 위기관리 기술을 습득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결론적으로 중국의 경제보복은 [표 1-1] 사례를 거치면서 진화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중국의 경제보복이 어떻게 변천해 왔는지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한 이유이다.

본 장에서는 이상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프중과 프노 갈등 비교분석 결과에서 취장(取长, 장점을 취하다)과 보단(补短, 단점을 보완하다)할 수 있는 시사점을 살펴보고, 이를 기반으로 한 대중국 통합적 위기관리 방향을 모색해 본다.

1_프중, 노중 갈등의 정책적 시사점

1) 정치·외교적 압박, 위기관리 차원의 조기 경고로 인식 필요

프랑스와 노르웨이와의 갈등 모두에서 중국은 사건이 발생하기 전과 경제보복 조치를 취하기 전에 다양한 루트를 통해 상대국을 경고한다. 그리고 경고에도 불구하고 상대국의 정책과 태도에 변화가 없을 경우 정치·외교적 압박과 함께 경제보복 조치를 단계별로 취한다. 이는 중국의 경고를 단순한 외교적 수사로 치부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다르게 표현하면, 중국은 사건 발생하기 전에 위기관리 차원에서 구두 경고를 한 것이다. 일종의 '억제'(deterrence) 전략을 쓴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경제보복을 가하기 전 정치적 조치를 통한 압박외교로 상대방의 태도 변화를 꾀하였던 것이다(중국 경제보복 특징별 정책적 시사점은 [표 5-1] 참조).

2) 경제보복 목적, 경제적 타격 아닌 정치적 '길들이기'

중국의 경제보복은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과 달리 상대적으로 단기적이고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국의 경제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금수조치와 금융제재보다는 보이콧 방식을 선택하였고, 양국 경제관계를 최대한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특정 산업을 타깃으로 제재 조치를 취하였다. 이는 중국의 경제보복 목적이 실질적 경제타격이 아닌 정치적 압박에 있기 때문이다. 특정 정치·외교적 목적 달성을 위해 경제력을 도구화한다는 경제보복 '정의'에 부합하게 경제보복을 압박 카드로 사용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일종의 상대방 '길들이기' 목적도 내포하고 있다. 중국의 경제보복은 상대국이 중국 국가핵심이익 관련 문제를 이슈화할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더 나아가 상응하는 '보복' 조치로 자국이 설정한 마지노선을 상대국으로 하여금 존중하게 만들겠다는 의도이다. 중국의 국가핵심이익을 존중하도록 상대국의 입장과 태도 변화를 '강제'하고자 하는 정책적 결정이 반영된 결과이다. 중국이 프랑스와 노르웨이를 상대로 실질적 경제 손실이 미비함에도 불구하고 세 번에 걸쳐 경제보복 조치를 취한 것도 이런 의도가 내포되어 있었기 때문으로 판단할 수 있다.

3) 정치적 효과 극대화 가능한 산업 집중 타격

중국 경제보복의 궁극적 목적이 정치적 타격, 특히 입장과 태도 변화에 있는 만큼 정치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산업을 타깃으로 삼았음을 알 수 있다. 프랑스 사례에서는 중국 내 대표적인 프랑스 유통업체인 까르푸에 대한 소비자 주도 불매운동이 정부의 암묵적 허락 아래 전국적으로 일어난다. 그리고 표면적으로 베이징시가 나서 프랑스 관광 '금지령'을 내린다. 둘 다 실질적 경제 손실보다 국민들이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고 사태의 심각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산업이라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중국은 사르코지 집권 시기 양국 관계의 상징적 합의라고 할 수 있는 에어버스 항공기 판매 최종 협상을 연기시켜 버린다. 사르코지 대통령의 대표적 대중국 경제외교 성과가 될 수 있는 합의에 '흠집'을 내면서 정치적 타격을 노린 것이다.

노르웨이와의 갈등에서도 중국이 노르웨이산 수산물 특히 연어에 대한 검역 강화와 수입 제한 조치를 내린 것도 역시 비슷한 이유이다. 2010년 기준 노르웨이 대중국 수출액 중 어류 비중은 약 17%이고, 그중 연어는 약 3%에 불과하다. 하지만, 대중국 수출품목 중 어류가 약 30%를 차지하고, 연어 같은 경우는 중국 내 시장점유율이 약 92%였기 때문에 경제보복의 체감 효과는 오히려 더 클 수 있다. 연어 수출량 급감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보다 2013년 10년간 유지해 온 대중국 연어 수출 1위 자리를 내주게 되었다는 사실이 더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4) 적극적 협상, 분쟁 해결에 도움

중국은 경제보복을 당한 상대국이 대화를 시도해 올 경우 거부하지 않았다. 그리고 상대국의 적극적인 협상은 경제보복을 포함한 각종 제재를 철회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중국의 경제보복이 위기관리 차원에서 이루어진 만큼 특정 정치·외교적 목적 실현과 분쟁 해결을 위한 소통과 협상을 지속적으로 거부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한 가지 눈여겨볼 부분은 '까르푸 불매운동'이 발생하자 말자 '친중 성향'의 전 총리를 포함한 고위급을 연이어 중국에 파견했던 프랑스에 반해, 노르웨이 정부는 '무대응'으로 맞서는 모습을 보인 점이다. 그 결과 중국과의 관계 정상화에 약 1년이 걸린 프랑스에 비해, 노르웨이는 약 6년이 걸린다. 2013년 중국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약 3년이나 걸렸음을 알 수 있다.

다른 한편, 프중 갈등과 달리 노중 갈등을 일으킨 주체가 정부가 아닌 민간(혹은 '반관반민')이였다는 점 역시 주목할 부분이다. 사건 초기 노르웨이 정부는 노벨위원회의

류사오보 노벨평화상 수상자 선정을 정부가 관여하지 않은 독자적 결정으로 선을 긋는다. 하지만 노르웨이 정부의 이런 입장과 달리 중국은 이를 국가 간 갈등으로 규정하고 구두 경고를 시작으로 정치적 압박, 그리고 경제보복까지 다양한 수단을 동원하여 노르웨이를 압박한다. 즉, 국가 간 갈등의 주체를 중앙정부에 한정시킬 수 없는 것이다. 추상적 개념인 국가를 구성하는 모든 행위체가 갈등 유발자가 될 수 있고, 동시에 앞선 분석에서 알 수 있듯이 해결의 주체도 될 수 있다.

5) '당근'뿐 아니라 '채찍' 동시 사용하는 압박외교 필요

프랑스와 노르웨이 모두 중국과의 갈등 과정에서 분쟁 해결을 위해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사용하는 압박외교를 펼쳤음을 알 수 있다. 중국의 정치·외교적 압박과 경제보복에도 불구하고 '지키고자 하는 것'을 사수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인다. 프랑스 같은 경우는 고위급 파견을 통해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도 인권을 중시하는 유럽국가로서 중국의 인권 문제를 지속적으로 거론하고, 만나겠다고 공표한 달라이 라마를 끝내 회견한다. 중국의 '체면'을 살려주는 의사결정을 하는 동시에 자국의 '체면치레'도 한 것이다. 물론 이는 티베트 문제가 장기화되는 것을 중국 역시 원치 않는다는 판단이 영향을 끼쳤음을 부인할 수 없다.

노르웨이 같은 경우도 2013년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기존의 '무대응'전략이 아닌 관계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압박외교를 실시한다. 노르웨이는 원명원 기둥과 무성영화 반환이라는 '선물 공세'와 함께 고위급의 달라이 라마 회견 취소라는 '저자세'의 모습을 보였지만, 이와 동시에 자국의 경제이익에 반하는 중국 측의 무리한 요구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제기해야 할 중국의 인권 문제 등에 대해서는 '단호한' 태도를 보인다. 중국과의 관계 정상화가 일종의 '굴종'이 아니라 말 그대로 양국 관계를 '정상'화시킨다는 것이다. 즉, 노르웨이 자국의 '마지노선'을 훼손하면서까지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할 의향은 없으며, 역으로 중국 역시 노르웨이의 국가이익을 존중해야 한다는 '길들이기' 측면이 강하다. 중국 정부가 중시하는 내정불간섭 원칙을 타국에게도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는 일종의 경고성 메시지이다.

결론적으로, '당근'과 '채찍'은 상대국으로 하여금 자국이 원치 않는 혹은 이익을 훼손하는 계획과 행위를 중단시키거나 취소하도록 하는 '억제' 전략과 '압박외교'의 가장 중요한 개념이다. 중국과의 갈등 과정에서 '당근'책과 함께 '채찍' 카드를 준비해야 하는 것은 '교과서'적인 접근법이라 할 수 있다.

[표 5-1] 프중, 노중 갈등의 정책적 시사점과 통합적 위기관리 구축 방향

경제보복 특징	정책적 시사점	위기관리 방향
경제보복 전, 조기 경고 (정치·외교적 압박)	• 위기관리 차원 조기 경고 : 단순 외교적 수사 아님 : 효과가 없을 시, 수위를 높일 수 있다는 경고 : 사건 발생 전 '억제'전략 : 경제보복 전 '압박외교'전략	• (평상시)다층 거버넌스 구축 : 중앙정부-지자체-민간 참여 협의체 운영 - 정보 수집과 역할 인식 부여 • (평상시)갈등 발생 가능 이슈 선별 및 분석 : 역사문제 등 미해결 문제 : 미중 갈등 이슈 : 중국 국가핵심이익 관련 문제 • (평상시)다양한 시나리오 마련 : 중국 대외정책 일반적 특징 : 경제보복 패턴 : 무력사용 패턴 - '학습' 통한 변화 감지 중요
보이콧 방식 선호 (경제적 피해 최소화)	• 경제적 타격이 아닌 '정치적 길들이기' 목적 : 중국이 정한 규범, 원칙, 의사결정 방식 '강요' : 국가핵심이익 관련 문제 이슈화 할 경우 좌시하지 않음 : 상응하는 '보복' 조치로 상대국 입장과 태도 변화 꾀함 • 정치적 효과 극대화 가능 산업 집중 타격 : 상대국 리더십 '흠집' 낼 수 있는 협의 파괴 : 타국과의 경제 분야 협정으로 우회적 타격 등 포함	• (평상시)중점 피해 산업 선별 및 지원책 마련 : 국민 체감도 높은 산업 : 대중국 수출 품목 혹은 산업 내 비중이 높은 산업 : 정상회담으로 합의된 경제 협력 사업 등 • 국내 치안 유지 : 민족주의 감정 폭력화 방지 - 상점 파괴, 폭력 사건 예방 • 여론전 방지 : 상대국 '악마화' 자제 : 시민외교와 분리 - '회복력' 고려
단기적·제한적 타격 (경제적 피해 최소화)		
불매운동 통제 (시위 변질 차단)		
목적 달성 전, 경제보복 지속	• 적극적 협상, 분쟁 해결에 도움 : 경제보복 포함 각종 제재 철회에 결정적 영향	• 관계 정상화 위한 입장 정리와 압박외교 실시 : 경제 피해 이슈와 정치·외교 문제 분리, 후자 중심의 협상 진행

위기관리 특징	정책적 시사점	위기관리 방향
프랑스의 적극적인 협상과 '체면'외교	• 적극적 협상, 분쟁 해결에 도움 : 경제보복 포함 각종 제재 철회에 결정적 영향 • 국가 간 갈등의 주체 '중앙정부'로 한정시키지 않음 : 사건 유발자, 분쟁 해결 주체 다층화, 다원화 • 압박외교 필요 : '당근'함께 '채찍' 사용	• 다층 거버넌스 위기관리 모드로 전환 : 체계적 의사결정과 관리 통해 전략적 접근과 합리적 위기관리 가능하도록 통합관리 중시 : 정보수집, 분석, 대응책, 실행 : 3단계 상호 연결 거버넌스 구축 – 청와대 중심 TF팀 – 시도지사협의회 중심 TF팀 – 지자체 중심 TF팀 • 다층적 소통 채널 확보와 특사 다원화 : 사안과 시점에 따라 소통 채널과 특사 선택 : 소통 채널 다원화 – (협상 주체 아닌)행정부, 입법부 전·현직 인사 파견 – 다자 틀 속 양자외교 추진 – 지자체 소통 채널 활용 ①자매·우호도시 관계 ②도시 네트워크 ③'한중 지사·성장 회의' 등 : 각계 '친중'인사 파견 – '중국인민의 오래된 친구' 양성과 파견
노르웨이의 '맞대응'전략과 반관반민 '압박외교'		• (평상시)마지노선 규정 : 갈등 가능 이슈별 기본 입장과 협상의 마지노선 규정 • (평상시)'채찍' 협상 카드 마련 : 기본입장에 대한 '일관성' : 중국 선호 교류협력 사업 : 중국 국가핵심이익 관련 이슈 – 인권, 대만도시 교류 등

자료: 저자 작성.

서울연구원 The Seoul Institute

2_통합적 위기관리 전략적 방향

1) 다층 거버넌스 구축으로 통합적 위기관리 시스템 마련

다층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통합적 위기관리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표 5-2]에서 알 수 있듯이 프중과 프노 갈등 과정에서의 사건 유발자와 문제 해결 주체가 중앙정부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이는 19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국제관계의 주요 특징 중 하나인 행위 주체의 다층화와 횡적인 업무 분장의 당연한 결과이다.[87] 이는 한편으론 모든 층위의 행위체 언행이 국가 간 갈등으로 번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다른 한편으론 외교 이슈가 다양해지면서 분야별 전문성을 요구하게 되고, 이로 인해 분쟁 해결의 주체 역시 다원화되었음을 의미한다. 즉, 모든 행위체가 국가 갈등의 당사자가 될 수 있고, 분쟁 해결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표 5-2] 프중, 노중 갈등 사건 유발자와 문제 해결 주체 비교

사례/주체		유발				당근				채찍				협상			
		국제	중앙	지방	민간	국제	중앙	지방	민간	국제	중앙	지방	민간	국제	중앙	지방	민간
프중 갈등	중						○				○		○		○		
	프		○				○		○	○	○	○	○		○		
노중 갈등	중						○		○		○		○		○		
	노				○		○		○	○	○				○		

주: 국제는 '국제기구', 중앙은 '중앙정부(산하기관 불포함)', 지방은 '지방정부(산하기관 불포함)', 민간은 '국제기구'와 '정부'를 제외한 주체를 의미함.

자료: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이런 외교 주체의 다층화와 다원화로 다층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국가이익의 직접적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위기상황에서는 전략적 접근과 합리적 위기관리를 위해 더욱더 필요하게 되었다.

이런 차원에서 평시와 위기 두 가지 모드의 대중국 통합적 위기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87) 이민규, 『도시외교 메커니즘과 발전방향』(서울: 서울연구원, 2020), pp.21-31.

필요가 있다. 평시 모드는 대중국 관련 정보 수집·공유와 역할 인식 부여를 주요 목적으로 중앙부서 관련 담당자, 지자체 대중국 교류 담당자, 그리고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협의체 형태로 운영되는 것을 구상해 볼 수 있다. 위기 모드 같은 경우는 신속한 의사결정과 통합적 관리가 가능한 형태로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최종의사결정자'가 확실한 다음과 같은 3단계 상호 연결된 거버넌스 구축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우선, 대통령 중심의 국가안보실과 관련 중앙 부처 장관, 그리고 지자체장 및 각 분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TF팀 구성이다. 이 TF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최종 의사결정과 역할 부여이다. 이와 동시에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대중국 자원을 집중시키고 효율적인 역할 수행을 위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중심의 협의회 차원의 TF팀이 구성되어야 한다. 지자체 간 거버넌스 구축은 각 지자체가 확보하고 있는 대중국 인적네트워크를 포함한 각종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는 측면도 있지만, 국가적으로 정해진 입장과 전략에 부합하는 입장 표명과 지자체 간 역할 충돌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마지막으로 각 지자체 자체적으로도 관련 부서 담당자와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TF팀이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지자체 차원의 TF팀 운영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점은 그 목적을 통합적 위기관리 틀 내 역할 수행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상위 거버넌스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독자적' 행위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청와대 중심의 국가적 차원, 대한민국시도지자협의회 중심의 지자체 차원, 그리고 지자체 중심의 '도시' 차원의 다층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역할 분담 기반의 통합적 위기관리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

2) 갈등 발생 가능 이슈 선정과 대응 시나리오 마련

다층 거버넌스 구축 이후 우선적으로 실행되어야 할 것은 한중 양국 사이에 발생 가능한 갈등 이슈를 선정하고 다양한 시나리오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는 위기가 발생한 이후 효율적인 통합적 위기관리를 위한 목적도 있지만, 중국의 조기경고를 탐지하기 위한 것도 있다. 한중 간 갈등을 경제보복 전 단계에서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정치·외교적 압박이 위기관리 차원에서의 조기경고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슈 선정과 관련하여, ①역사문제를 포함 한중 간 미해결 상태로 남아있는 문제, ②미중 갈등 이슈, 그리고 ③중국 국가핵심이익 관련 문제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한중 간 양자 이슈뿐 아니라 미중 갈등 이슈를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이유는 양국 간 관계 내실화가 정착되기도 전에 미중경쟁이 본격화되면서 지난 28년간 축적된 양자 문제에 더해 미중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는 전략적 딜레마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후자 같은 경우는 한국이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사드배치 이슈 때와 같이 경제보복뿐 아니라 무력 사용 압박까지 받을 수 있다.

시나리오 연구와 관련해서는 통상적인 중국 대외정책과 이슈별 전략에 대한 연구뿐 아니라 ①경제보복 패턴, ②무기사용 패턴, ③협상 기술과 특징 등이 종합적으로 분석되어야 한다. 이중 경제보복 패턴과 관련해서 주목할 부분은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중국의 경제보복 전략과 수단이 국력별, 이슈 성질별, 그리고 지역별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3) 중점 피해 산업 지원책 마련과 치안 유지

중국 경제보복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타깃이 될 수 있는 산업 지원을 중심으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중국의 경제보복이 가해지면 한중 양국 경제관계 전반에 대한 진단과 함께 타깃이 된 산업의 지원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 경제보복의 특징을 감안하면 후자를 더욱 중시할 필요가 있다.

중국 경제보복의 타깃이 된 산업에 대한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양국 간 진행 중인 산업별 경쟁을 포함한 '경제적 분쟁'과 '경제보복'을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 통상적인 경제 분쟁을 경제보복 대상으로 오판할 경우 갈등이 양국 경제관계 전반적으로 확대될 수 있고, 외교적으로 해결할 이슈와 경제적으로 해결할 이슈가 섞이게 되어 효과적인 위기관리를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중점 피해 산업 선별은 우선적으로 다음 세 가지 기준이 검토될 수 있다. 첫째, 국민들이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산업이다. 예를 들어, 관광업과 파생 산업이 해당된다. 둘째, 대중국 수출 품목 혹은 의존도가 높은 산업이다. 즉, 대중국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높지 않지만, 수출 시장이 다원화되지 못한 산업이 해당된다. 셋째, 양국 정상 간 합의된 경제 협력 사업이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와 각 지자체는 국가와 지역차원에서 향후 중국 경제보복 타깃이 될 수 있는 구체적인 산업과 수출 품목을 사전에 선별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여, 위기 발생 시 신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한중 양국 간 분쟁 발생 이후 중국 상품 불매운동이나 중국인 상대 폭행과

같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치안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민족주의 감정을 자극하고 상대국을 '악마화'하는 여론전 역시 자제시킬 필요가 있다. 이는 민족주의 감정이 폭력화되어 불필요한 사건이 발생하는 것을 막는 차원도 있지만, 관계 정상화 이후 양국 관계 '회복력'을 고려한 위기관리이기도 하다. 한중 양국 국민들 간 감정이 악화되면 비록 정부 간 합의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다양한 층위의 교류·협력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 이로 인해 정부의 관련 정책 역시 명분을 상실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위기관리는 '위기 후'도 포함된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4) 다층적 소통 채널 확보와 특사 다원화

다층 거버넌스를 기반으로 다양한 소통 채널 확보와 플랫폼을 활용하는 전략도 필요하다. 이는 사안과 시점에 따라 가동할 수 있는 소통 채널이 달라질 수 있고, 중국 '문화 특색'의 위기관리 특징을 고려하였을 때 중앙정부 차원의 협상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소통 채널 다원화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접근이 가능하다. 첫째, 프중 갈등에서 프랑스가 취한 것처럼, 협상의 주체가 되는 담당자가 아닌 행정부 인사 혹은 입법부 수장과 전직 인사를 특사로 파견하는 방법이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다. 전직이라도 중국에 의해 '중국통'으로 불리는 인사는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둘째, 예정되어 있는 국제회의 혹은 국가기구를 활용하는 방안이다. 다자 틀 내에서 고위급 간 양자 회담을 개최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자는 것이다. 특히, 관계 정상화가 되기 전에 양국 정상이 국빈방문을 통해 정상회담을 하는 것은 정치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 제3국에서 개최되는 다자회의를 통해 약식의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추진되어야 한다.

셋째, 지자체가 확보하고 있는 소통 채널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 역시 고려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서울시는 한국 수도의 행정부로서 적극적인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이하의 소통 채널이 작동될 수 있도록 '솔선수범'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우선, 한중 양국 지방정부는 광범위한 양자 소통 채널을 확보하고 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자료에 의하면, 2019년 말 기준 총 667건(자매도시 222건, 우호도시 445건)의 자매·우호도시 협정이 체결된 것으로 나타난다.[88] 지자체별 다소 차이는

---

88) https://www.gaok.or.kr/gaok/exchange/listNation.do?menuNo=200163(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홈페이지).

있지만 대다수 광역지자체 대중국 교류 담당자들은 중국 측 외사판공실 담당자와의 소통 채널이 확보되어 있다. 이는 양국의 입장과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루트가 될 수 있다. 다른 한편, 지방정부 간 사회문화교류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보다 정치적 민감도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경색된 국면에서 시도할 수 있는 낮은 단계의 교류로 적극 검토될 필요가 있다. 그중에서도 자매·우호도시 기반 지자체 주도 '시민외교'(citizen diplomacy)는 양국 국민들의 상한 감정을 '치유'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한중 양국 도시들이 참여 중인 다국적 도시 네트워크(city network) 역시 중요한 소통기제 역할을 할 수 있다. 특히 중앙정부 간 소통이 원활하지 않을 때 활용될 수 있는 기제이다. 그중에서도 한중 양국 48개 지방정부 수장이 참여하는 '한중 지사·성장회의'는 분쟁 해결과 관계 정상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기제로서 구체적인 역할을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 회의를 주목해야 할 주요 이유는 일단 참석자들의 자국 내 정치적 위상과 영향력이 크다는 점이다. 그리고 본회의 일정에 개최국 총리 예방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 역시 간과할 수 없다. 실제로, 2016년 6월 제1회 회의에서는 황교안 국무총리를, 2018년 11월 제2회 회의 때는 리커창(李克强) 총리를 예방하였다.[89]

특사의 다원화와 관련하여, 중국 공산당과 인민이 '인정'하는 각계 친중 인사를 특사로 파견하는 것 역시 고려될 수밖에 없는 전략적 선택이다. 협상과정에서 친중 성향의 인사와 설사 고위층이라고 해도 그렇지 않은 인사가 이끌어낼 수 있는 결과는 일정부분 차이를 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중국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친중 인사를 선별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 공산당이 '규정한' '중국인민의 오래된 친구'(中国人民的老朋友)는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

중국은 1949년 건국 이래 양국 관계 발전 혹은 자국의 발전에 큰 공헌을 한 인물에게 중국인민의 오래된 친구라는 호칭을 부여해 오고 있다. 이들의 구체적인 역할을 규정하기는 힘들지만, 양국 관계가 교착상태에 빠졌을 때 분쟁 해결을 위한 징검다리 역할을 한 많은 사례를 발견할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 1989년 11월 천안문 사태로 미중 양국 관계가 경직되었을 때, 1979년 미중수교에 결정적 역할을 했던 전 미국 국무장관 헨리 키신저(Henry A. Kissinger)가 중국을 전격 방문하여 양국 관계 개선에 큰

89) 프중 갈등에서 프랑스가 중국에서 개최되는 다양한 층위의 회의 참석을 표면적 이유로 특사를 파견하였다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방안이라 할 수 있음.

역할을 하게 된다. 당시 그는 덩샤오핑(邓小平), 장쩌민(江泽民), 천치선(钱其琛) 등 주요 중국 지도부를 만나 양국 현황과 발전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눈다.[90]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부분은 중국인민의 오래된 친구들이 양국 모두에서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여야 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만약 한국에 이런 인물이 없을 경우 지금부터라도 정치적 성향과 무관하게 국가적으로 양성할 필요가 있다.

5) 마지노선 설정과 '채찍'으로 사용 가능한 협상 카드 마련

협상력 제고와 '정상적인' 관계 정상화를 위해 이슈별 마지노선 설정과 '채찍' 사용 여부를 다각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중국을 상대로 채찍용 협상 카드를 사용하는 것은 효과 자체를 떠나 또 다른 정치적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마지노선 설정과 '채찍'은 연관되어 있다. '채찍' 카드가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이슈별 마지노선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마지노선은 시기와 상황에 상관없이 '일관성'을 보여야 한다. 평상시에도 일관된 입장 표명과 정책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마지노선은 다층 거버넌스 내에서 규정될 필요가 있다. 대외적으로 일관된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에서 민간까지 '합의'가 필요할 뿐 아니라, 실제 위기관리 과정에서 공조되지 않은 특정 행위체 단독의 '채찍' 사용은 관계를 악화시키는 결과만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 '채찍' 카드로 다음 몇 가지가 고려될 수 있다. 첫째, 한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높은 중국의 특정 산업에 타격을 주는 '맞대응'전략이다. 물론 실질적인 경제적 타격보다는 정치적 효과를 낼 수 있는 품목과 방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같은 맥락에서 중국이 선호하는 교류·협력 사업을 중단하는 것 역시 고려될 수 있다.

둘째, 현재까지 전략적으로 회피해온 중국의 인권 문제를 압박 카드로 사용하는 방안이다. 중국의 인권 문제는 미중 경쟁시대 주요 충돌 이슈이자 유럽 국가들이 가장 중시하는 보편적 가치로 중국의 '주권 중심론'과 '내정불간섭'에 대응할 수 있는 협상카드이다. 이로 인해 중국의 큰 반발을 일으킬 수 있지만 정치적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분산되는 측면도 있다. 관건은 평상시 중국 인권 문제를 포함 국제적 인권 이슈에 일관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점이다. 그렇지 않으면 중국과 갈등이 발생하였을 때 인권

---

90) 중국인민의 오래된 친구에 대해서는 이민규, 2014, "'중국인민의 오래된 친구' 관점에서 본 한중관계 현주소", 포스코청암재단 뉴스레터, http://www.mynewsletter.co.kr/postf/201410/12.html 참고 바람.

문제 제기라는 채찍 카드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정치적 리스크를 줄이는 차원에서 프중 갈등에서 파리시와 의회가 보여준 것처럼 지자체 차원에서 중국의 인권 문제를 거론하거나 중국내 인권 인사를 지원하는 것 역시 고려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이다. 이 결정 역시 평상시 특정 지자체의 입장과 도시외교 활동 여부에 달려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한국의 지자체가 대외적으로 어떠한 국제적 이미지를 구축할 것인가이다. 즉, 국제적 인권 중시 도시로 발전해 나갈 것인지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인권 이슈와 같은 맥락에서 대만 문제 역시 고려할 수 있는 채찍 카드이다. 이 역시 중앙정부 차원에서 거론하는 것보다 지자체가 대만 도시와의 교류·협력을 강화하여 중국을 압박하는 전략이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 중앙정부의 '하나의 중국' 원칙 존중 입장과 별개로 도시 간 교류·협력을 강화시킴으로써 상황에 따라 대만 문제를 '국제화'시킬 수 있다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다.

넷째, 중국과 분쟁 중인 국가의 입장과 정책을 지지하는 것 역시 고려될 수 있다. 남중국해와 센카쿠 열도 문제처럼 첨예하게 대립하는 이슈에 대해 중국이 아닌 상대 국가를 지지함으로써, 중국의 태도에 따라 그동안 중립적 입장을 취해왔던 한국이 '반중국'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주는 것이다. 이는 미중 간 첨예하게 대립 중인 5G와 같은 다른 이슈에도 적용될 수 있다. 즉, 중국 국가핵심이익 관련 모든 이슈는 상황에 따라 분쟁의 소지도 될 수 있고, 중국 압박 카드도 될 수 있다. 핵심은 중앙정부와 각 지자체의 전략적 판단과 지향점이다.

참고문헌

김진용, 2018, “사드 배치와 중국의 대한국 강압외교 동인”, 「동아연구」, 37권 2호, pp.221-249,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우완영, 이희옥, 2017, “중국의 아시아운명공동체 담론과 외교적 투사”, 「중국연구」, 73권 0호, pp.337-362, 한국외국어대학교 중국연구소.

유현정, 주재우, 2017, “한국의 사드배치 결정에 대한 중국의 대한(對韓) 경제보복과 한국의 대응방안”, 「세계지역연구논총」, 35권 2호, pp.167-186, 한국세계지역학회.

이민규, 2014, “‘중국인민의 오래된 친구’ 관점에서 본 한중관계 현주소”, 포스코청암재단 뉴스레터.

이민규, 2017, “중국의 국가핵심이익 시기별 외연 확대 특징과 구체적인 이슈”, 「중소연구」, 41권 1호, pp.41-75,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이민규, 2017, “인민해방군, 중국 국가핵심이익 수호의 한 축: 역사적 사명과 강군 건설의 필요성”, 「성균차이나브리프」, 5권 4호, pp.108-112, 성균중국연구소.

이민규, 2020, “협력과 갈등의 기로에 선 한중관계”, 이희옥, 강수정 책임편집, 「전환기 동북아 질서와 한중관계의 재구성: 한·중 학계의 시각」, 도서출판 선인.

이민규, 2020, 「도시외교 메커니즘과 발전방향」, 서울연구원.

이민규, 2020, 「국가핵심이익: 중국 화평발전노선의 내막을 읽는 키워드」, 서울연구원.

이원봉, 2018, “中, 불타는 애국심…속 타는 까르푸”, Kotra 해외시장뉴스.

이정남, 2018, “시진핑(习近平)의 중국몽(中国梦): 팍스 시니카(Pax-Sinica)구상과 그 한계”, 「아세아연구」, 61권 4호, pp.166-193,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임대근, 2017, “대중문화”, 성균중국연구소 엮음, 「한중수교 25년사」, 성균관대학교출판부.

정규재, 최영선, 2014, “중국의 북극개발 진출 전략과 전망”,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14-15호, pp.3-16, 에너지경제연구원.

홍건식, 2018, “시진핑의 중국몽과 정체성 정치: 일대일로, AIIB 그리고 패권정체성”, 「국제정치논총」, 58권 1호, pp.99-146, 한국국제정치학회.

서울연구원 The Seoul Institute

Acuto, Michele and Steve Rayner, 2016, "City Networks: Breaking Gridlocks or Forging (new) Lock-ins?", *International Affairs*, 92(5), pp.1147-1166.

Chen, Xianwen and Roberto J. Garcia, 2016, "Economic Sanctions and Trade Diplomacy: Sanction-busting Strategies, Market Distortion and Efficacy of China's Restrictions on Norwegian Salmon Imports", *China Information*, 30(1), pp.29-57.

Fuchs, Andreas and Nils-Hendrik Klann, 2013, "Paying a Visit: The Dalai Lama Effect on International Trade",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91(1), pp.164-177.

Kolstad, Ivar, 2016, "Too Big to Fault? Effects of the 2010 Nobel Peace Prize on Norwegian Exports to China and Foreign Policy", *CMI Working Paper*, 3, pp.1-28.

Kolstad, Ivar, 2020, "Too Big to Fault? Effects of the 2010 Nobel Peace Prize on Norwegian Exports to China and Foreign Policy", *International Political Science Review*, 41(2), pp.207-223.

Lin, Faqin, Cui Hu, and Andreas Fuchs, 2019, "How Do Firms Respond to Political Tensions? The Heterogeneity of the Dalai Lama Effect on Trade", *China Economic Review*, 5(C), pp.73-93.

Norwegian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pportunities for All: Human Rights in Norway's Foreign Policy and Development Cooperation", *Meld. St. 10(2014-2015) Report to the Storing(white paper)*, 2014.

Reilly, James, 2012, "China's Unilateral Sanctions", *The Washington Quarterly*, 35(4), pp.121-133.

Sverdrup-Thygeson, Bjørnar, 2015, "The flexible cost of insulting China: Trade politics and the 'Dalai Lama effect", *Asian Perspective*, 39(1), pp.101-123.

Zeng, Jinghan, 2017, "Is China Committed to Peaceful Rise? Debating How to Secure Core Interests in China", *International Politics*, 54(5), pp.618-636.

Zhou, Jinghao, 2019, "China's Core Interests and Dilemma in Foreign Policy Practice", *Pacific Focus*, 34(1), pp.31-54.

张清敏, 李敗窺, 2011, "中国对外行为的思想根源探析",「外交评论」, 28卷 4期, pp.3-20.

노컷뉴스, 2019.08.06., "美, 韓 등에 중거리 미사일 배치 추진…제2 사드사태 되나?".

매일경제, 2014.05.23., "노르웨이 정부, 중국의 북극섬 매입 시도에 제동".

산업일보, 2017.04.06., "중국-노르웨이, 외교마찰로 빚어진 경색국면에서 정상화 합의까지".

서울신문, 2010.10.15., "'류샤오보 갈등'에 노르웨이 역공".

아시아경제, 2008.04.09., "사르코지 '올림픽개막식에 프랑스 참가 안할 수도'".

연합뉴스, 2010.09.28., "中 '류샤오보, 노벨평화상 정신과 정반대'".

연합뉴스, 2010.10.13., "中, 노르웨이 뮤지컬 공연도 취소".

연합뉴스, 2010.10.15., "中, '친중 노르웨이인' 동원 노벨상 비판".

연합뉴스, 2010.12.10., "노벨평화상 오늘 시상식..어떻게 진행될까?".

외교부, 2017.10.31., "한중 관계 개선 관련 양국간 협의 결과", 보도자료.

유로포커스, 2008.07.10., "사르코지의 대 중국 외교 갈팡질팡".

이민규, 2017.06.04., "한·중 '원칙 없는 주고 받기' 안 통한다", 중앙SUNDAY.

이민규, 2019.01.12., "[전문가 프리즘] 한한령 무뎌졌지만 거안사위해야", 중앙SUNDAY.

중앙일보, 2008.03.26., "사르코지 '올림픽 개막식 보이콧할 수도'".

중앙일보, 2016.12.20., "중국, 핵심이익 침해한 노르웨이에 6년 만에 화해".

헤럴드경제, 2012.06.14., "中 '뒤끝 작렬'..유치한 보복외교".

Benjamin David Baker, 2015, "From China with Love: China, Norway and Espionage", The Diplomat.

Deutsche Welle, 2008.04.22., "Dalai Lama Receives Parisian Citizenship, Requests US Help".

France 24, 2008.12.13., "France claims a cyber attack on its Beijing embassy website".

Global Times, 2010.10.09., "2010 Nobel Peace Prize a disgrace".

Ministry of Foreign Affairs(Government.no), 2014.03.31., "Norway supports China's participation in Trade in Services Agreement talk".

Norway Today, 2018.07.06., "China repeals salmon ban".

Newsinenglish.no, 2014.9.12., "Norway won't let China build radar".

The New York Times, 2014.05.07., "Norway's Leaders Snub Dalai Lama in Deference to China".

The Washington Post, 2007.11.26., "France Gets $29.62B in Chinese Contracts".

Undercurrent News, 2017.05.25., "Norway targets $1.5bn seafood exports to China by 2025".

서울연구원 The Seoul Institute

东方卫视(搜狐网), 2008.11.27., “视频: 萨科齐将见达赖, 中方推迟中欧领导人会晤”.

环球时报, 2008.05.30., “中国抵制是法国旅游业的‘灾难’”.

环球时报, 2008.06.10., “法国呼吁中国停止‘旅游抵制’”.

环球时报, 2015.02.06., “挪指责‘中俄间谍威胁’, 中方: 指控充满冷战色彩”.

环球时报(CCTV.com), 2008.12.06., “中国民意警告法国将为见达赖付出代价”.

环球网(新浪网), 2014.09.09., “中国拟禁止进口整条挪威三文鱼: 防ISA病毒传入”.

纽约时报中文网, 2014.02.12., “圆明园七根石柱将从挪威‘回家’”.

RFI, 2008.04.21., “达赖胡佳获巴黎市荣誉市民称号, 很多议员未参加投票”.

人民日报, 2008.04.24., “爱国, 在道义与法治的轨道上”.

人民网(搜狐网), 2009.11.26., “李其庆：中法外交风波与中国新时期外交”.

新华网, 2009.02.09., “法国前总理拉法兰访华媒体称其将修补中法关系”.

新华网(中国日报网), 2012.04.28., “巩固传统友谊, 深化互利合作, 促进共同发展”.

新华网(搜狐网), 2008.04.27., “习近平: 中法关系凝聚几代领导人心血 来之不易”.

新华社(中央政府门户网站), 2007.11.25., “法国总统萨科齐抵达西安开始对中国进行国事访问”.

新华社(中央政府门户网站), 2008.04.19., “专家: 经济全球化时代 理性对待‘抵制家乐福’事件”.

新华社(中央政府门户网站), 2008.04.22., “法国参议长蓬斯莱看望金晶并转交萨科齐总统信函”.

新华社(中央政府门户网站), 2009.01.27., “温家宝总理27日下午抵达瑞士苏黎世开始欧洲之行”.

新华社(中央政府门户网站), 2013.05.16., “中国, 印度等6国成为北极理事会正式观察员国”.

中华人民共和国外交部, 2008.04.24., “温家宝会见法国前总理拉法兰”.

中华人民共和国外交部, 2016.12.19., “中华人民共和国政府与挪威王国政府关于双边关系正常化的声明(全文)”.

中华人民共和国外交部(搜狐网), 2008.04.15., “2008年4月15日外交部发言人姜瑜举行例行记者会”.

中华人民共和国外交部(中华人民共和国外交部驻澳门特别行政区特派员公署), 2008.04.01., “2008年4月1日外交部发言人姜瑜举行例行记者会”.

中华人民共和国外交部(中华人民共和国驻圭亚那合作共和国大使馆), 2010.10.08., “外交部发言人马朝旭答记者问”.

中华人民共和国外交部(中华人民共和国驻日本国大使馆), 2008.04.10., “2008年4月10日外交部发言人姜瑜举行例行记者会”.

中华人民共和国驻挪威王国大使馆经济商务参赞处, 2014.04.22., “挪威公开支持中国参与 ‘服务贸易协定’ (TISA) 谈判”.

中国广播网(搜狐网), 2008.04.22., “商务部: 家乐福超市所销售产品中95%为中国制造”.

中国新闻网(新浪网), 2020.02.12., “‘非典’曾如期访华 法国前总理拉法兰今为武汉加油”.

中国新闻网(中国经济网), 2008.11.14., “法国总统萨科齐称12月6日将在波兰会见达赖喇嘛”.

中国网, 2008.04.23., “胡锦涛主席特别代表赵进军访问法国”.

中国网, 2008.04.24., “胡锦涛:希望法方妥善处理两国关系新问题”.

https://www.gaok.or.kr/gaok/exchange/listNation.do?menuNo=200163(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홈페이지)

https://sites.duke.edu/icbdata/(ICB Project 홈페이지)

https://comtrade.un.org/(UN Comtrade Database 홈페이지)

https://www.unwto.org/statistics(World Tourism Organization 홈페이지)

http://www.chinese-embassy.no/chn/zngx/(中华人民共和国驻挪威王国大使馆 홈페이지)

서울연구원 The Seoul Institute

Abstract

Characteristics of Chinese Economic Retaliation Against Developed European Countries and Integrated Crisis Management Strategies

Min-gyu Lee

In the past, China was engaged in economic retaliation against France and Norway, two leading countries in the Europe. This study provides insight into the dynamics of this economic retaliation, the crisis management strategies of France and Norway, and analyses how South Korea can learn from the conflict resolution efforts of these two nations as it develops political strategies to manage potential conflicts with China, as well as the role of local government in the process. The conclusion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The economic retaliatory measures taken by China show that the country a) exerts political or diplomatic pressure before economic retaliation against the target country, b) boycotts goods and services more often than embargoes or financial sanctions to minimize the adverse impact on its own country, c) minimizes the direct impact on the targeted country's economy by restricting the scope of retaliation as its main purpose is to inflict political damage, d) allows protests in China, as long as they are under the Party's control, and e) continues to adopt retaliatory measures until political and diplomatic goals are accomplished.

When China saw boycott campaigns against Carrefour, the French retailer, the French government's first move was to immediately dispatch high-level officials to China, as part of its efforts to resolve conflict with Beijing. It is

particularly notable that this was quickly followed by a visit from a former Prime Minister of France who is a long-time friend of China. These actions show that French authorities well understand "guanxi", the dynamics of social network deeply rooted in Chinese culture. The French approach was centered around ways to protect "mianzi", or the social (or in this case, political and diplomatic) status of the two countries.

On the other hand, the Norwegian government stated that the Nobel Committee's decision over the 2010 Nobel Peace Prize (at the heart of China's dispute with Norway) was non-governmental as the Committee is independent of the government, while taking a tit-for-tat approach against the political and diplomatic pressures from China. Oslo also took China's restrictions on imports of Norwegian seafood to the WTO, making the dispute an international matter. The "carrot" in its strategy was to open windows of opportunity for a broader cultural and human exchange, with coercive diplomatic measures being the "stick".

The strategy of France and Norway has implications for the Korean government's crisis management capabilities regarding South Korea-China relations. First, the initial political and diplomatic pressures from China serve as warning signs. Second, Chinese economic retaliation is all about political taming of the targeted country, not damaging its economy. Third, China targets certain industries to maximize the political impact of retaliation. Fourth, China is open to negotiation when the country is hit by retaliation to begin dialogue. Lastly, Negotiation is effective only when backed by both "carrot" and "stick". The conclusions of our analysis leave five key lessons for South Korea with regard to crisis management strategies. Normal South Korea-China relations require the Korean government to a) identify issues on which the two countries may not see eye-to-eye and create conflict resolution scenarios for each topic, b) build a multi-level governance system to expand the role of each actor, c) prepare key industries for any potential damage and design support systems for those industries, d) diversify communication channels and send special envoys that best understand China and its culture, and e) identify the strategic limits for each issue and prepare a "stick" for negotiations.

Contents

01 Introduction

1_Background and Purpose of the Study

2_Main Contents and Research Methods

02 France-China Conflict over the 2008 Tibetan Unrest and China's Economic Retaliation

1_France-China Conflict Timeline

2_China's Political and Diplomatic Pressure

3_China's Economic Retaliation and Its Impact

4_Process and Styles of Conflict Resolution

03 Norway-China Conflict over the Nobel Peace Prize and China's Economic Retaliation

1_Norway-China Conflict Timeline

2_China's Political and Diplomatic Pressure

3_China's Economic Retaliation and Its Impact

4_Process and Styles of Conflict Resolution

04 Characteristics of China's Economic Retaliation and Key differences in Crisis Management Strategies of France and Norway

1_Purpose and Major Aspects of the Chinese Economic Retaliation

2_Key Differences in Crisis Management Strategies of France and Norway

The Seoul Institute

05 South Korea's Integrated Crisis Management on China

1_Political Implications

2_Strategic Directions

서울연구원 The Seoul Institute

중국의 유럽 선진국 대상 경제보복 특징과 통합적 위기관리 전략

서울연 2020-PR-02

발행인 서왕진

발행일 2020년 8월 31일

발행처 서울연구원

ISBN 979-11-5700-537-6 93340 6,000원

06756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

이 출판물의 판권은 서울연구원에 속합니다.